

FIS 해외재정동향

2026년 1-4월

- Ⅰ 주요국
- Ⅱ 국제기구
- Ⅲ 현안분석



일 러 두 기



1. 주요국의 재정동향과 국제기구 연구동향은 월간 「나라재정」 각월호의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편집하였습니다.
2. 현안분석은 당시 작성시점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FIS 해외재정동향」 발간시점과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재정동향의 관련 출처와 원자료는 각주의 URL 및 인용정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FIS 해외재정동향

총 괄 재정혁신본부 홍학의 본부장

연 구 진 (현안분석) 김명규 연구위원, 김민경 부연구위원, 서영빈 부연구위원, 이정욱 부연구위원
(재정동향) 양선모 연구원, 김도현 연구원, 엄용현 연구원, 김미영 연구원, 최민혜 연구원

문 의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부(02-6908-8200)

Contents

I. 주요국

미국	6
독일	19
영국	29
프랑스	36
일본	41
중국	51

II. 국제기구

OECD	58
IMF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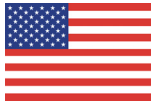
III. 현안분석

OECD 재정 건전성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72
프랑스 재정위기론과 연금개혁 과정의 시사점	78
독일 재정의 중기 지속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87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재정대응의 시사점	95
2026년 독일 예산안 주요 내용	103

I. 주요국

미국	6
독일	19
영국	29
프랑스	36
일본	41
중국	51

주요국 재정동향은 월간 「나라재정」 각월호의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편집한 것임.



미국

(1) 연준 금리

■ (25.12.10.)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인하 및 정책결정 조치 공표¹⁾

- 연방준비이사회(Board of Governors)는 2025년 12월 10일 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3.50~3.75%로 25bp 인하할 것을 결정
 - 이번 정책금리 25bp 인하 결정은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3회 연속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최근 몇 달 동안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판단을 유지한 결과
 - 또한, 지급준비금 감소 판단에 따라 지급준비금 수준 유지를 위해 월 \$400억 규모의 단기 국채 매입을 개시(매입은 상황과 준비금 상황에 따라 규모를 조정)
- 9월 대비 12월 FOMC 경제전망 확인 결과, 2026년도 경제성장률은 상향,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하향, 실업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을 유지²⁾
 - 2026년 경제성장률 상향(1.8 → 2.3%),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 하향(2.6 → 2.4%) 및 근원 PCE 하향(2.6 → 2.5%), 실업률 전망(4.4%)
- FOMC의 정책 결정이 신중한 완화 기조로 평가됨에 따라 주가 상승과 국채금리 및 달러 가치 하락을 견인, 시중은 연준의 자산 매입 개시를 예상보다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51210a1.pdf>

2)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2025.12.10.), p.2

■ (3.18.)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 및 통화정책 경로 유지³⁾

- 미 연방준비제도는 3월 FOMC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흐름을 더 확인한 뒤 향후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 이번 결정은 고금리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면서도, 경기 둔화와 물가 재상승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겠다는 신중한 대응으로 해석
 - 성명서에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지만, 물가에 대해서는 다소 상승했다고 표현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
 - 반면, 노동시장은 최근 몇 달간 큰 변화가 없어서 고용 둔화는 아직 본격화 되지 않았다고 진단
-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포워드 가이드선도 그대로 유지하여 고금리의 장기화 우려가 확산
 - * 포워드 가이드선 : 추가 금리 조정의 폭과 시기는 경제지표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침
 -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금리 25bp 인하 의견을 제기했으나, 연준 다수는 현 수준 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
 - 점도표(SEP)에서는 연말까지 1회 금리 인하 가능성만 반영, 이후 2027년 1회 추가 인하를 거쳐 최종적으로 3.125% 수준에 수렴하는 경로만을 제시
 - 시장이 기대하던 빠른 완화보다 훨씬 신중한 경로로, 사실상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남겨 둔 셈
- 관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등 경제전망은 모두 직전보다 상향 조정
 - 핵심 PCE 물가상승률은 2026년 2.7%, → 2027년 2.2%로 높아졌고, 성장률 전망도 2026년 2.4% → 2027년 2.3%로 상승

3) <https://am.jpmorgan.com/kr/en/asset-management/institutional/insights/portfolio-insights/fixed-income/fixed-income-perspectives/fomc-statement-march-2026/>

- 반면 실업률 전망은 큰 변화가 없으나, 향후 경기 하방 위험 경계 의견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장과 연준 내부 모두에서 인플레이션과 성장의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으로 정리되며, 연준은 당분간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데이터 확인에 초점을 맞출 계획

(2) 고용 및 물가

■ (25.12.18.) 노동통계국,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2025년 11월) 공식 발표⁴⁾

-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은 2025년 12월 18일 'CONSUMER PRICE INDEX-NOVEMBER 2025'를 공표
 - * CPI는 대표 소비자물가 지표로, 통화정책(특히 향후 금리 경로 기대)과 실질임금 소비 여력 판단과 연관
-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은 2.7%로 전문가 전망치(3.1%)와 지난 9월 CPI 상승률 3.0%를 하회
- 근원 CPI는 2.6% 상승 하였으며, 9월의 3.0%보다 둔화되어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및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짐
- 한편, 10월 CPI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 섯다운으로 인한 정부 예산 공백으로 데이터를 별도 집계하지 않았으며, 월간 CPI 수치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최초 사례

■ (1.9.) 노동통계국, 미국 고용동향(2025년 12월) 정기 발표⁵⁾

-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은 2026년 1월 9일 'Employment Situation(고용동향)' 2025년 12월분을 발표
 - * 고용동향은 비농업 고용, 실업률 등 노동시장 핵심지표를 제공하며, 경기 국면 판단, 통화 정책 기대 등을 강하게 좌우

4)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5) https://www.bls.gov/schedule/news_release/empisit.htm

- 12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은 5만 명 증가하였으며, 시장 예상치 6만 명 증가, 전월 5.6만 명 증가보다 상승 폭이 줄어 시장 전망에 미치지 못함
 - 업종별로는 건설업, 소매업, 제조업 등에서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게 발생
- 반면, 실업률은 4.4%로 전월 4.5%에 비해 0.1p 감소하여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3.8% 올라, 전월 3.6%보다 0.2p 확대

* 11월 실업률은 BLS가 당초 발표한 4.6%에서 4.5%로 하향 조정

■ (2.27.)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시행에 따른 감세와 2월 고용·물가 전망⁶⁾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른 개인소득세 및 기업세 감세와 각종 공제 확대가 2026년 초부터 본격 반영되면서, 2월에는 대규모 환급과 임금 실수령액 증가가 겹쳐 소비와 고용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 미국 기업투자 활성화와 미국 우선주의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대규모 감세, 국방 증액,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축소, 반도체 투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제정된 종합 경제·산업 정책 법안

-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톰 바킨(Thomas I. Barkin) 총재는 최근 몇 달간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지표가 이어지므로, 향후 발표될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도 연준 목표를 상당 폭 상회할 것이라고 언급
- 바킨 총재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고 인플레이션 하락이 지연될 시, 연준의 위험 균형이 다시 물가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지적해, OBBBA 감세 같은 재정 완화가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제약할 수 있음을 시사
- 2월 고용·물가 지수의 확정치는 공개 전이나, 세제 변화로 인한 가계의 단기 소비 여력 확대와 탄탄한 고용 지속, 높은 수준의 서비스 물가가 결합하여 1분기 성장 흐름은 강화되는 반면 물가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과 주요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제기

6) <https://www.reuters.com/business/feds-barkin-sticky-inflation-better-jobs-data-could-shift-risk-outlook-fed-bbg-2026-03-05/>

-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2026년 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유지하되, 그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관망 기조가 우세

(3) 예산안 심의

■ (1.31) 상원의회, 예산안 하원 송부 부분 섀다운 시작⁷⁾

- 1월 29일 상원 민주당 지도부, 토요일에 시작되는 정부기관 섀다운 방지를 위한 주요 예산안 패키지 심의에 합의 후 30일 1.2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예산안을 통과⁸⁾
 - 연방정부 대부분에 대한 예산을 9월까지 전액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2조 달러 규모의 예산이 71대 29로 상원을 통과
 - 이번 합의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전체 패키지에서 분리해 현재 수준으로 2주간 지원하는 것을 포함*
- 상원에서 예산안을 통과하였으나 자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3일 하원의 개회와 승인 시점까지 불가피한 예산 공백과 섀다운이 발생⁹⁾
 - 예산지원이 30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부분 섀다운이 2월 3일 전까지 지속되며, 예산지원 중단 부처는 비필수 기능을 축소하여 운영 예정
 - 영향부처(부분 섀다운) : 국방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 국무부, 재무부, 연방사업부, 연방조달청 등
 - 영향이 없는 부처(기 예산 확보) : 법무부, 상무부, 농무부, 내무부, 보훈부 등

*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제한 사항, 단속 등 조치를 논의할 시간 마련 목적

7) <https://www.wsj.com/politics/policy/senate-set-to-vote-on-deal-ahead-of-partial-governments-shutdown-7bc3968b>

8) <https://www.reuters.com/world/us/deal-reached-advancing-spending-bills-avert-us-government-agencies-shutdown-2026-01-29>

9) <https://www.wsj.com/politics/policy/what-to-expect-in-a-partial-government-shutdown-d5f7a7b6>

- 대통령이 합의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만큼, 하원 의회 개회 초기 시점에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유지
 -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3일 밤 나머지 예산안과 국토안보부 예산 연장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

■ (2.2) 트럼프 대통령,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부분 섯다운 신속 종료 촉구¹⁰⁾

-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의원들에게 정책적 요구를 접고 30일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지지하여, 연방정부의 부분 섯다운을 신속하게 종료할 것을 촉구
 - 부분적 섯다운이 30일 발효되고 하원의 예산안 통과를 기다리는 시점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예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원 의원들이 힘을 모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 * 1월 30일 상원 예산안 통과 후 2월 3일 하원 통과 시점 전까지 최소 사흘간의 불가피한 예산 공백과 부분 섯다운 발생
 -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경우 상원 민주당이 협상한 예산안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
 - * 유권자들이 투표 전에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투표법 추가(VOTE Act)를 요구
- 하원의장은 5개 세출법안과 국토안보부 2주 연장 등 전체 예산안 패키지를 3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조
 - 공화당은 하원에서 근소하게 과반을 차지하므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
 - 다만, 하원에서 법안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법안이 상원으로 다시 돌아가므로 섯다운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과 우려도 존재

10) <https://www.wsj.com/politics/policy/trump-pushes-house-republicans-to-end-partial-shutdown-quickly-37961020>

(4) 미·이란 전쟁

■ (3.2.)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와 세계시장 영향¹¹⁾

-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공습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여 중동 긴장이 급격히 고조
 - 지난 2월 28일, 이란 고위 관리들을 표적으로 삼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테헤란 주변 미사일 공격으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
 - 이란은 역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겨냥한 보복을 경고하는 등 군사적 대처 국면이 지속
- 국제 금융시장은 이란 공습 직후 ‘위험 회피(risk-off) 심리’가 강화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유가와 금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주요 증시는 하락 후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등 혼조세
 - 주요 산유국과 역내 세력의 추가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사태가 단기 국지 충돌에 그칠지, 보다 광범위한 지역 분쟁으로 확대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 이러한 불확실성은 금융·원자재 시장 전반의 위험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공습 직후 국제유가가 장개시와 함께 급등하고, 안전자산 선호로 금 가격이 오르며, 위험자산인 주식과 고위험 통화는 일시적으로 약세
 - 3월 2일 뉴욕증시는 중동 긴장 고조 소식과 함께 S&P500 지수 등 주요 지수가 하락했으나 장중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혼조세로 마감하는 등, 단기 충격과 일시적 사건이라는 인식이 교차
- 에너지, 통화, 채권시장에서는 사태 장기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으며, 원유 공급 차질 우려와 함께 브렌트유 가격이 세 자릿수(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11)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market-analysts-react-us-israel-strikes-iran-2026-02-28/>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how-us-iran-tensions-could-shape-world-markets-2026-02-28/>
<https://www.reuters.com/business/wall-street-futures-slide-middle-east-conflict-escalates-2026-03-02/>

- 중동 지역은 세계 원유, 가스 공급의 핵심 허브로, 호르무즈 해협은 해상 원유 수송의 주요 관문
- 이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 봉쇄 가능성은 유가, 운임, 위험 등에 따른 프리미엄 상승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파급될 높은 가능성이 존재
- 일부 시장 전문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이나 공격 확대 같은 지정학적 충격이 계속 발생할 경우, 과거 중동 분쟁 때와 유사한 시장 변동성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
 - 유가는 현재의 기준선(약 73달러)보다 5~10달러 이상 추가 상승할 수 있으며, 극단적일 경우 프리미엄(50% 수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
 - 언론, 시장 전문가의 분석 등에서는 중동 긴장 지속이 공급 차질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재상승 리스크와 성장 둔화 리스크 사이에서 통화정책 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

■ (4.13.) 미국-이란 종전협상 결렬과 호르무즈 재봉쇄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¹²⁾

-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이란 1차 종전협상이 21시간 이상 지속됐으나 핵무기 포기·호르무즈 통제권·군사 기지 배치 등 핵심 이슈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실상 결렬¹³⁾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대한 명확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협상 결렬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하며, 미국이 협상 테이블을 떠나 해상 봉쇄 준비로 전환함을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이란이 부과하던 통행료와 통제권을 무력화하고 이란 항구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차단지침을 발령¹⁴⁾

12) <https://www.jpmorgan.com/insights/markets/iran-ceasefire-setup-risk>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wall-street-futures-drop-after-us-iran-peace-talks-fail-2026-04-13/>

13)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us-iran-talks-pause-now-disagreements-remain-2026-04-11/>

14) <https://www.wsj.com/world/middle-east/free-seas-iran-strait-hormuz-toll-3404b2e1>

-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며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통행료 수입을 노렸던 구조에서, 미국이 미국 주도로 봉쇄하는 '역봉쇄 구조'로 전환
- JP Morgan은 미국-이란 갈등 재격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2026년 글로벌 금융시장을 좌우할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
 - 다수의 경제전문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원유 교역의 약 20%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 협착점임을 강조
 - 만약,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원자재 가격 급등-인플레이션 격화-금리 추가 인상-자산가격 하락 경로 전개 가능성 상존
 - 그러므로 전쟁 종식 여부가 2026년 금융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임을 경고
 - 만약 이란 전쟁이 6주 이상 지속될 경우, 미국 성장률 전망은 0.7~1.0%p 하향, 인플레이션을 0.5~1.0%p 상방 조정할 수 있다고 예측
-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제로 이어지거나, 지연·우회 항로를 통해 원유 교역이 이루어질 경우, 유가 급등, 에너지 프리미엄 등과 같은 증장기적인 차질이 발생¹⁵⁾
 - JP Morgan 리서치는 호르무즈를 통한 교역이 6주 이상 차질을 빚을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에 1.5~2백만 배럴/일 수준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¹⁶⁾
 - 호르무즈 긴장 고조 시 Brent는 배럴당 70.50달러까지 치솟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전일 대비 +3.1%), WTI도 65.30달러(+3.3%) 수준으로 급등
 - 4월 11일 협상 결렬 직후에도 Brent가 장중 100달러 초반대까지 재진입하는 급등이 관측되는 등 긴장이 지속될 경우 Brent 유가에 10~15달러 수준의 위험 프리미엄이 추가될 우려
 - 유럽·아시아의 에너지 수입국은 이란산 유량 감소를 중동·아프리카·러시아산 원유로 보완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

15) <https://www.wsj.com/world/middle-east/iran-holds-strong-cards-in-trumps-blockade-odk3pz9q>

16) <https://www.jpmorgan.com/insights/global-research/commodities/iran-us-tensions-market-effect>

- 주식시장도 미·이란 협상 결렬과 호르무즈 재봉쇄 우려로 인해 미국 내 주요 지수가 혼조·소폭 하락하는 등 영향이 발생
 - 4월 13일 장 마감 기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약 0.2% 하락, S&P 500은 약 0.1% 하락, 나스닥 지수는 약 0.3% 하락
 - 변동성 지수(VIX)는 4월 11~13일 사이 18에서 25 수준으로 약 38% 급등
 -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월 6일 4.45%까지 올랐으나, 4월 7일 휴전 합의 발표 후 4.28%로 일시 하락했다가, 4월 11일 협상 결렬과 호르무즈 재봉쇄 지시 후 다시 4.35% 수준으로 재상승

(4) 기 타

■ (2.5) 세인트루이스 연준 은행, 미국 연방 재정 수지 동향 분석¹⁷⁾

- 세인트루이스 연준 은행은 재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년 12월까지 연방 예산을 분석하여 재정 동향을 제시
 - 지난 1년간 재정적자*는 12개월 누적액 기준 약 3,500억 달러 감소했으나, 경제 침체기를 제외한 시기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사상 최고수준에 근접
 - * 이자비용을 제외한 수입과 지출 차이
 - 관세 추가 수입은 약 1,900억 달러로 나타나, 관세 발효 전 연간 관세 수입 약 8,000억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이자 비용 제외 연방 지출은 12개월 누적 지출 기준 6.9조 달러로 정체 상태를 유지
- 2026년도 재정전망은 2025년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감세와 지출삭감 대법원 관세 합법성 판결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7) <https://www.stlouisfed.org/on-the-economy/2026/fed/look-recent-developments-federal-fiscal-balance>

□ (2.20.) 연방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상 상호관세 부과 위헌판결¹⁸⁾

-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교역상대국에 부과한 대부분의 글로벌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하고 해당 관세 조치를 무효화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 :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 사태 선포 시 대외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등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

- 연방대법원은 IEEPA가 전통적으로 적성국* 자산동결, 금융제재 등에 사용되며, 관세 부과 권한은 법률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상 의회에 속한 과세 권한이라고 판단

* 적으로 간주될 수 있거나, 전쟁법규 상 군사적인 행위를 가해올 수 있는 범위에 드는 국가

- 이번 위헌판결은 위헌 6대 합헌 3으로 판결되어, IEEPA를 근거로 하는 글로벌 상호관세와 일부 국가와 품목에 부과된 추가 관세가 위법하므로 법적 근거를 상실
- 연방대법원은 사건을 국제무역법원(CIT)으로 돌려보내 관세 환급 범위와 절차를 다루도록 조치
- 판결 직후 관세수입 처리와 무역정책 방향을 둘러싼 행정부, 의회, 업계의 이해관계 조정 논의가 본격화, 향후 새 관세정책 설계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 펜워튼(Penn-Wharton) 예측 모형*에 따르면, IEEPA 관세로 2월 19일까지 누적 징수된 관세수입은 약 1,680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
 - * 미국 연방 정책이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독립적 예측 모형(펜실베이니아 대학)
 -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대법원판결 사흘 뒤인 2월 23일부터 IEEPA 기반

18)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us-supreme-court-rejects-trumps-global-tariffs-2026-02-20/>
<https://www.reuters.com/world/us-tariff-revenue-risk-supreme-court-ruling-tops-175-billion-penn-wharton-2026-02-20/>
<https://www.reuters.com/legal/legalindustry/tariff-ruling-will-not-save-tariff-evaders--pracin-2026-03-09/>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향후 관세 환급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¹⁹⁾

-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존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10% 수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도입과 추가 무역 조사를 지시하는 등 강경한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²⁰⁾
 - 새로 제안된 10% 글로벌 관세는 의회 승인이나 다른 무역법을 근거로 설계될 수 있으며, 기존 IEEPA 관세 환급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메우고, 협상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으로 평가
 - 수입업체들은 과거 IEEPA 관세에 대한 환급 청구를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관세 체계가 비용,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등 이중적인 리스크관리에 나서는 상황

■ (4.8.) GENIUS Act 시행령 제정, 디지털 자산 규제 제도화²¹⁾

- 재무부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은 국가 혁신법(GENIUS Act)에서 명시하고 있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가이드 확립을 위한 시행령을 발표
 - * 국가혁신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
 - 시행령에는 GENIUS Act의 자금 세탁 방지 및 제재 준수 프로그램 요건을 구현
 -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불법 금융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맞춤형 체제를 제공
- 이번 시행령은 GENIUS Act에서의 효과적인 제재를 준수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

19) <https://www.reuters.com/world/us/us-customs-agency-stop-collecting-tariffs-deemed-illegal-by-supreme-court-2026-02-23/>

20) <https://www.reuters.com/world/china/trump-orders-temporary-10-global-tariff-replace-duties-struck-down-by-us-supreme-2026-02-20/>

21) <https://www.fincen.gov/news/news-releases/treasury-proposes-rule-implement-genius-acts-requirements-counter-illicit>

-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에게는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하여 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고 GENIUS Act에 명시된 의무를 부과
-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을 현대화하려는 FinCEN의 노력을 반영하여 의무는 목적에 맞게 조정되고, 법 집행을 지원하며,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독일

(1) 경제성장률 전망

■ (1.20) 정부,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²²⁾

- 독일 정부는 국제 무역의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하여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0%로 하향 조정
 - 2025년 하반기 저조한 회복세가 2026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진단(연례 경제 보고서)
 - 전문가들은 독일 경제가 여전히 고물가, 높은 금리, 미국의 관세 위협을 비롯한 대외 무역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
 - 2027년 GDP 성장률은 기존 예상치인 1.4%에서 1.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하향 조정 전망은 세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유럽연합(EU)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독일을 포함한 일부 EU 회원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
- 경제학자들은 근로일 수 증가와 국방 및 인프라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가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지적

■ (2.17.) 상공회의소, 2026년 성장률 1% 전망²³⁾

- 독일 상공회의소(Deutsche Industrie- und Handelskammer, 이하 DIHK)는 독일 경제가 2026년에도 저성장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22) <https://reuters.com/world/europe/germany-cut-2026-gdp-growth-forecast-10-source-says-2026-01-20/>

23)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economy-remains-stuck-10-growth-2026-expected-dihk-says-2026-02-17/>

- DIHK는 2026년 독일 경제성장률을 약 1.0%로 전망하며 작년 10월 전망(0.7%) 대비 상향 조정
- 그러나 여전히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낮아 독일 경제가 회복이 아닌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
- 독일 기업들은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인해 투자와 고용을 모두 축소할 계획
 - 독일 기업 대상 조사 결과, 투자 확대 계획 기업은 23%, 투자 축소 계획 기업은 31%
 - 고용 측면에서도 신규 채용 계획 기업은 12%, 인력 감축 계획 기업은 23%
 - 주요 경영 리스크는 수요·비용·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 경영 리스크 응답 비중은 내수 부진 59%, 인건비 상승 59%, 정책 불확실성 58%, 에너지·원자재 가격 부담 48% 차지
- DIHK는 고비용 구조와 정책 불확실성을 중장기 성장 제약요인으로 지적함
 - DIHK는 현재 투자지표, 고용 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
 - 높은 노동비용 및 에너지 비용과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며, 단기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 국면으로 진단
 - 규제 완화, 비용 부담 완화, 구조개혁 추진 등 중장기적 기업환경 개선 정책 필요성을 강조

■ (3.19.) 독일 경제, 작년 말의 회복세를 뒤로 하고 올해 초 다시 경제성장 둔화²⁴⁾

- 독일 경제는 2025년 말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6년 초 들어 산업 생산, 신규 수주, 소매 매출 등 주요 지표가 눈에 띄게 감소
 - 이란 관련 갈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 등 중동지역의 새로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제 회복 프로세스가 취약해진 상태
- 1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 신규 수주 전월 대비 11.1% 감소하였으며,

24)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EN/Pressemitteilungen/Wirtschaftliche-Lage/2026/20260319-the-economic-situation-in-germany-march-2026.html>

실질 소매 매출 전월 대비 0.9% 감소,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반등

- 산업 생산은 특히 소비재(-4.2%)와 중간재(-2.6%) 부문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반면, 건설업(+2.9%)과 에너지 부문(+10.3%)은 증가세
- 신규 수주의 경우, 작년 4월 대규모 공공 투자 및 조달 프로젝트로 인한 기저 효과와 더불어 국내 수요(-16.2%)와 해외 수요(-7.1%)가 모두 위축된 결과
-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2.1%, 2월 2.0%을 기록하며 소폭 하락하였으나, 3월 들어 2.8%로 반등²⁵⁾

*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7.2% 상승하며 2023년 12월 이후 첫 반등을 기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실업률, 고용지표 유지에 따른 노동시장 정체 및 기업 파산 증가세 지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 2월 실업률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고용 지표 역시 뚜렷한 반등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2025년 전체 기업 파산 건수는 전년 대비 10.3% 증가, 2026년 초에도 증가세가 지속

■ (4.1.) 춘계 합동 경제 전망(Joint Economic Forecast) 발표²⁶⁾

- 독일 IFO 연구소, RWI 에센 경제연구소, IWH 할레 경제연구소 춘계 합동 경제 전망 결과,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3%에서 0.6%로 절반 이상 하향 조정
 -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 제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며 회복세 억제

25) <https://www.morningstar.com/news/dow-jones/202603304741/german-inflation-rebounds-on-soaring-energy-prices-update>

26) <https://www.ifo.de/en/press-release/2026-04-01/joint-economic-forecast-spring-2026-energy-price-shock-dampens-recovery>, <https://www.rwi-essen.de/en/press/science-communication/press-releases/translate-to-english-detail/joint-economic-forecast-spring-report-2026-energy-price-shock-dampens-recovery-inflation-rises>, <https://www.iwh-halle.de/en/topics/economic-outlook>

-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과 지출 증가로 독일 정부의 재정 운용이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
 - 성장률류 하락으로 당초 예상했던 조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국방비 증액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투입 등 대규모 재정 지출 수요는 오히려 급증
 -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이 고수해 온 ‘부채 준칙(Debt Brake)’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독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의 일시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의 가변성이 향후 통화정책과 소비 심리에 불확실성 가중
 - 연구소들은 현재 독일의 물가상승률은 1%대 후반에 머물러 있으나,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반등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
 - 이러한 거시경제적 불안이 가계의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시장 회복 지연, 기업의 장기 투자 계획 유보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진단

(2) 경제 지표

■ (25.12.17.) ifo, 12월 기업체감지수 하락(전월 88.0 → 87.6), 기업 심리 악화 시사²⁷⁾

- 독일의 ifo 연구소는 2025년 12월 17일 ifo 기업체감지수(ifo Business Climate Index)를 발표

* 기업체감지수는 제조업·서비스업 등 기업 심리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여 독일 실물경제의 선행지표로 폭넓게 활용

27) <https://www.ifo.de/en/facts/2025-12-17/ifo-business-climate-falls-december-2025>

- 12월 ifo 기업체감지수는 87.6으로 나타나 전월 88.0 대비 0.4p 하락, 현상 황지수(Assessment of business situation)는 85.6으로 전월과 동일하나, 기대지수(Business Expectation Index)가 전월 90.5에서 89.7로 소폭 하락 하여 지수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무역, 서비스업 등에서 기대지수 하락이 두드러졌고, 건설업도 기업체감지수의 흐름이 둔화
- 이는 고금리 환경의 지속, 수요 회복 지연, 에너지·비용 부담이 기업 심리에 계속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으며, 다수의 독일 기업이 2026년 상반기 등 미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



* 출처: ifo Business Climate Index for Germany(2025.12.17.), ifo Business Climate Falls(2025.12.)

■ (1.12.) 독일 경제인 단체, 독일 내 기업 파산 급증에 대한 우려 표출²⁸⁾

- 2026년 1월 12일 로이터 통신은 독일 내 기업 파산이 최근 11년 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독일 상공회의소(Deutscher Industrie-und

28)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german-business-lobby-raises-alarm-over-highest-number-bankruptcies-11-years-2026-01-12/>

Handelskammertag, DIHK)의 경고를 보도하며 독일 정부의 즉각적 구제 정책 없이는 완화 기미가 없음을 경고

- 독일 지방법원 10월 기업 파산 등록 건수 2,108건(전월 대비 4.8% 증가), 12월 예측치는 전년도 12월 대비 15.2% 증가 예상

- 고금리 환경, 비용 부담, 수요 약화 등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수 기업의 현금흐름을 압박하면서 파산 위험이 증가
- 기업 파산 증가는 고용 조정과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어 경기 둔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은행권 부실채권 위험, 지역경제 충격 등 금융 이슈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여 향후 독일 성장 전망과 유로존 경기에 직·간접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 존재

■ (1.28) 2026년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소폭 개선²⁹⁾

- 독일의 선행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2026년 GfK 소비자 신뢰지수가 -24.1을 기록
 - 독일 시장조사 전문 GfK와 뉘른베르크 시장판단 연구소(NIM)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1월 -26.9에서 2.8 포인트 개선되어, 시장 예상 수치인 -26.0을 1.9 포인트 상회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입 기대가 상승하고 물가상승 우려도 후퇴한 것이 개선에 기여
- 세부 항목 가운데 가계 소득 전망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어 소비자 신뢰지수 전체 상승에 기여
 - 향후 1년간 가계 재정 상황을 묻는 소득 기대 지수가 -6.9에서 +5.1로 급등
 - * 독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6년 초 13.90유로로 상승, 내년에는 14.60유로로 추가 인상 예정
 - 향후 1년간 경기 전망 지수는 1.2에서 6.6으로 상승하였으며*, 소비자 구매 의향 지수도 -7.5에서 -4.0으로 개선**
 - * 향후 독일 경제 전반의 흐름에 대한 응답자들의 긍정적 평가 의미

29) <https://nim.org/en/consumer-climate/detail-consumer-climate/konsumklima-erholungstendenzen-auf-niedrigem-ni-veau>

** 고가의 내구재 구매 시기 적절성에 대한 긍정·부정 응답의 차이를 수치화, 물가 상승 압력 완화에 대한 인식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며,

- 저축 의향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2월은 17.9를 기록, 1월(18.7)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8.2)에 비해 높은 수준

- * 소비 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성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

■ (2.13.) 연방경제에너지부, 26년 2월 월간 경제 동향 발표³⁰⁾

- 연방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이하 BMW)는 2월 월간 경제 동향을 발표하며, 소비 활동이 소폭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음을 분석

- 지난해 말 산업 생산은 에너지 부문의 약세로 1.9%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생산 증가

- * 특히 국내 대형 물량으로 인한 12월 신규 수주 7.8% 증가로 향후 산업 활동의 점진적 회복 기대

-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소폭 감소했으나, 2025년 전체 소매업은 2.7% 성장

- * 최근 심리지표들은 2026년 초부터 소비 활동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음을 시사함

- 다만 1월 물가상승률이 2.1%로 소폭 상승하고 노동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등 고물가 및 내부 비용 상승 요인이 회복 속도를 제약

- 2026년 1월 물가상승률은 2.1%로 전월(1.8%) 대비 소폭 상승

- *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의료 등 서비스 부문의 임금 인상과 식품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주도

- 고용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지표 둔화로 인해 1월 실업률이 정체되는 등 고착화된 상태

30)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EN/Pressemitteilungen/Wirtschaftliche-Lage/2026/20260213-the-economic-situation-in-germany-february-2026.html>

- 1월 기업 파산 건수는 전월 대비 8% 감소하여 경영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

(3) 재정 지출

▣ (2.23.) 독일, 유럽 내 독보적인 국방비 지출국으로 부상³¹⁾

- 독일은 과거 군사력 확대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유럽 안보 환경 변화와 미국의 압박 속에서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결정
 -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군사국가 역할을 요구 받는 상황
-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는 GDP 대비 2% 국방비 기준을 상향하고 있으며,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 더 높은 부담을 요구
 - 독일은 단순한 증액을 넘어 장기적으로 3% 이상의 국방비 지출 확대 압력에 직면
 - 이는 유럽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흐름과 연결
- 국방비 확대는 재정 규율(부채 제한)과 충돌하며 정책적 딜레마 발생확률이 상승 가능
 - 사회 내부에 군비 확대에 대한 역사적 부담과 함께 복지와 국방의 지출 우선 순위 갈등이 존재
 - * 국방비 확대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닌 정치사회적 논쟁 사안에 해당
- 독일의 국방비 확대는 단일 국가 정책이 아닌 유럽 전체 재무장 흐름의 핵심 축에 해당
 - 향후 유럽은 공동 방위 역량 강화, 방산 협력 확대를 추진하며, 독일이 그 중심에서 재정·군사적 리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31) <https://www.nytimes.com/2026/03/03/world/europe/germany-military-defense-spending-europe-nato.html?smid=url-share>

■ (3.3.) 도이체뱅크, ‘부채 브레이크 완화’ 후 1년에 대한 평가 발표³²⁾

- 독일 정부는 2025년 ‘부채 브레이크’를 완화하여 약 5,0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여력을 확보
 - 기존의 균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국방 및 인프라 중심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
 - 핵심 쟁점은 대규모 차입이 실제 투자 및 성장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 대규모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다년간 투자 프로그램 및 적자 급증
 - 2025~2029년 공공지출 확대 프로그램(일명 “Big Berlin Bill”) 추진
 - * 약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기후 투자, GDP 1% 초과분에 대한 국방비 차입 허용, NATO 목표 3.5% 수준 확대 등
 - 이로 인해 재정수지는 2025년 1,430억 유로의 순차입(GDP 대비 3.3%)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2%p 수준의 적자가 확대
- 재정지출 확대는 방산·인프라 중심 투자 기회를 확대했으나, 행정 절차 및 규제로 집행이 지연
 - 방위산업, 에너지, 인프라, 엔지니어링 등 민간부문 투자 기회 확대 요인으로 작용함
 - * 특히 방산 분야는 생산 확대 및 공급망 구축 수요 증가
 - 그러나 인프라 투자 집행은 행정 절차 및 규제로 인해 지연 발생
 - 전체 투자 패키지 규모는 최대 1조 유로 수준으로, 유럽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
- 소비·정부지출 중심의 ‘약한 회복’으로 경기 효과는 제한적
 - 독일 경제는 최근 2년간 침체 이후 가계 소비 및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소폭 성장 전환
 - 설비·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수출은 미국 관세, 유로화 강세, 중국 경쟁 심화로 부진
 - 결과적으로 재정책대에도 불구하고 투자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은 지연

32) <https://www.nytimes.com/2026/03/03/world/europe/germany-military-defense-spending-europe-nato.html?smid=url-share>

- 향후 재정적자 확대 및 구조적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재정전망이 악화
 - 2026년 재정수지는 적자 규모가 GDP 대비 2.4%에서 3.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국방비 및 공공투자 증가, 연금 지출 확대 및 이자비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추가적으로 행정·계획 지연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실제 집행 및 효과 불확실성이 존재

■ (3.20.) 중동 위기 여파로 세수 감소 및 적자 폭 확대³³⁾

- 독일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MF), 3월 월간 보고서 발표
 - 지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931억 유로), 수입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 (594억 유로)
- 부가가치세 정산 방식의 변경 등에 따른 2026년 1~2월 누적 세수 감소, 근로 소득세 소폭 증가
 - 2026년 1-2월 누적세수는 부가가치세 변경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7.6%(45억 유로) 감소
 - 근로소득세는 임금 인상에 힘입어 약 4.5% 증가했으나, 노동시장의 약화로 향후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투자 지출 전년 동기 대비 104.2% 급증(94억 유로), 소비 지출 4.1% 증가 (837억 유로)
 - 연방고용청에 대한 유동성 지원(34억 유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기금에 대한 대출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
 - 국방 및 보안(파트너 국가의 보안·방위·안정화 강화 지출) 18억 유로 증가
 - 사회보장(공적 연금 보험에 대한 연방보조금) 15억 유로 증가
 - 에너지 지원(전기 요금 완화 보조금) 14억 유로 감소
- 에너지 쇼크로 인한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2026년 전체 재정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GDP의 3.5%)보다 높은 3.75~4.75%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3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Monthly_Report/Key_Figures/2026/2026-03-federal-budget.html



영국

(1) 물가 및 금리

■ (1.21.) 영국의 물가상승률,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³⁴⁾

- 담배 가격과 항공료 상승으로 영국의 물가상승률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 2025년 12월까지 1년 동안 3.4%로 상승하며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소폭 상승보다 높은 수치 기록
 - 물가상승률은 2025년 11월까지 1년 동안 3.2%에서 상승하였으며, 예상치인 3.3% 상회
 - 이번 물가 상승은 영란은행의 연례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발생
- 영란은행은 2025년 말 기준금리를 3.75%로 인하하였으며, 2월 5일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
- 일부 분석가들은 12월 데이터에 크리스마스 기간 항공료와 예산안에서 발표된 담배세 인상 등 일시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 상승 추세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
 - 영국 통계청(ONS)은 크리스마스과 새해 연휴 기간 항공료가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또한 2025년 11월 26일 예산안 발표에서 제시된 관세 인상으로 인해 담배 가격이 상승함

34) <https://bbc.co.uk/news/articles/cnvg251g25yo>

■ (2.5.)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동결³⁵⁾

-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이하 BoE) 통화정책위원회(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이하 MPC)는 2026년 2월 5일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하기로 결정
 -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봄까지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
 - * 일부 위원은 0.25%p 인하를 주장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투표 결과 5대4의 근소한 차이로 동결 결정
- 기준금리를 3.75%로 유지하는 데 투표한 위원들은 경기 부진과 고용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유로 신중한 금리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인한 위험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 완화의 여지가 있으나, 향후 회의에서 금리 인하 정당성을 검토할 것(앤드류 베일리 총재)
 - 임금 및 근원 인플레이션 강세와 달리 경기 활동 부진, 고용 둔화가 관측됨에 따라 빠른 금리 인하로 발생하는 비용 우려(클레어 롬바르델리 통화정책 부총재)
 - 지난 2년간 빠른 정책 제한 완화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압력 경계, 장기 추세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 강조(휴 필(Huw Pill) 수석 이코노미스트)
 -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정책 오류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추가 완화를 고려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안정의 증거 확인 필요(메건 그린 외부 MPC 위원)
 - 금리 인하 시 단기적인 물가상승 억제 효과 과대평가, 장기 금리 프리미엄 상승 위험 경고(캐서린 맨 MPC 외부 위원)
- 기준금리를 3.5%로 인하하는 데 투표한 위원들은 가계 저축률 상승, 노동 시장 악화 등에서 비롯되는 하방 위험이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하며 중립 금리 3% 목표 주장

35) <https://reuters.com/world/uk/bank-england-holds-rates-375-surprisingly-close-vote-2026-02-05/>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하방 위험에 대비해 조금 더 빠른 완화 정책 필요(사라 브리든 부총재)
- 인플레이션 중앙 전망치가 하방 압력에 기울어져 있어 중기적으로 2% 목표를 지속 가능하게 달성하기 위해 정책이 보다 덜 제한적이어야 함(데이브 램스텐 부총재)
- 시장이 예상하는 기준금리 경로는 너무 긴축적이며, 노동 수요가 약한 상황에서 저지르는 정책적 실수는 하방 위험이 훨씬 더 커 보임(스와티 덩그라 MPC 외부 위원)
- 6개월 후 상당한 금리 인하 여력이 발생하면서 금리가 목표치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중립 금리인 3%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앨런 테일러 MPC 외부 위원)

■ (2.18.) 영국 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³⁶⁾

-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이하 ONS)은 2026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
 -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전년 대비 3.0%를 기록하며 작년 12월 수치(3.4%)보다 0.4%p 하락
 - * 교통, 식품, 비주류 음료 부문의 가격 하락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월별 변화에 가장 큰 영향
 - 근원물가상승률(core CPI)은 전년 대비 3.1%를 기록하며 작년 12월 수치(3.2%)보다 0.1%p 하락
 - * 근원물가상승률은 일부 재화(에너지, 식품, 주류, 담배)의 가격 변화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

36) <https://www.ons.gov.uk/economy/inflationandpriceindices/bulletins/consumerpriceinflation/january2026>

(2) 경기 및 경제성장률 전망

▣ (3.13.) 영국 통계청, 1월 월간 GDP 발표³⁷⁾

- 영국 통계청(ONS)은 1월 GDP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0%대 성장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2026년 1월 GDP 성장률은 작년 11월 0.2%, 작년 12월 0.1%에 이어 0%를 기록하였음
 - 부문별 성장률은 서비스 부문은 0%, 생산 부문은 0.1% 하락, 건설 부문은 0.2% 증가
- 2026년 1월 기준 최근 3개월 실질 GDP는 작년 11월 기준 0% 증가, 작년 12월 기준 0.1% 증가에 이어 2026년 1월 0.2%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교통, 식품, 비주류 음료 부문 가격 하락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월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부문 최근 3개월 실질 GDP는 작년 12월 기준 0% 증가 이후 0.2% 증가
 - 생산 부문 최근 3개월 실질 GDP는 작년 12월 기준 1.2% 증가에 이어 1.3% 증가
 - 건설 부문 최근 3개월 실질 GDP는 작년 11월 기준 0.9% 증가, 12월 기준 2.1% 감소에 이어 2.0% 감소
 - 근원물가상승률(core CPI)은 전년 대비 3.1%를 기록하며 작년 12월 수치(3.2%)보다 0.1%p 하락
 - * 근원물가상승률은 일부 재화(에너지, 식품, 주류, 담배)의 가격 변화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

37)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gdpmonthlyestimateuk/january2026>

■ (3.14.) 예산책임청(OBR), 2026 춘계 경제 전망 및 재정 여력 심층 보고³⁸⁾

* 재정 여력(FISCAL HEADROOM) :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재정 준칙'을 준수하면서 추가로 지출하거나 감세할 수 있는 예산상의 여유분

- 영국 예산책임청(이하 OBR)은 춘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6년 실질 GDP 성장률을 1.1%로 하향 조정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 가용 범위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경고
 -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방 리스크가 영국 내 실질 임금 성장을 저해
 - 이로 인해 향후 5년 내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핵심 재정 목표 달성이 '면도날 차이(Razor-thin margin)' 수준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분석
- 특히 공공 부문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가계 소득 정체와 세수 감소의 악순환이 고착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여 인프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적 혁신을 촉구
- 보고에 따르면 2026년 말 기준 국가 부채 이자 비용은 세수의 약 1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 이는 공공 서비스 지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3) 조세 개편 및 재정준칙 재설계

■ (3.3.) 영국 정부, 2026 춘계 경제전망(Spring Forecast) 발표³⁹⁾

-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재무장관은 하원에서 대규모 증세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에 초점을 둔 <2026 춘계 경제전망>을 발표함
 - 차입 감소와 국채 금리 안정화로 인해 영국의 재정 준칙 대비 가용 재원인 재정 여력(fiscal headroom)이 약 240억 파운드로 소폭 증가

38) <https://obr.uk/efo/economic-and-fiscal-outlook-march-2026/>

39) <https://www.gov.uk/government/news/spring-forecast-2026-the-right-economic-plan-for-britain>

- 민생 지원책으로는 에너지 비용 150파운드 감면 유지, 유류세 동결 연장 등 영국 내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
-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이하 OBR)은 2026년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1%로 하향 조정함⁴⁰⁾
 - OBR의 이번 하향 조정은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 가능성을 반영

■ (4.6.) 2026~27 회계연도 개시, 국가생활임금 인상 및 조세 구조 개편안 전격 시행⁴¹⁾

- 4월 6일부터 영국의 신규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역대 최대 폭의 국가생활 임금 인상과 고소득자 세부담 강화 등 복합적인 조세·노동 정책이 현장에 적용
 - 국가생활임금은 시간당 £12.71(전년대비 4.1% 인상)로 상향되어 약 300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수혜
 - 반면 중소기업, 산업계에서 인건비 급증에 따른 고용 축소 및 상품 가격 인상 등, ‘비용 압력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
 - 조세 측면에서는 소득세 과세 구간 동결이 유지되어 명목 임금 상승에 따른 ‘재정적 끌어당김(Fiscal Drag)’ 현상이 가속화되어 전 계층에 대한 보편적 증세 효과를 유발
 - * 재정적 끌어당김(Fiscal Drag) : 물가 상승으로 명목 소득은 오르지만 면세 한도나 과세 구간이 고정되어, 납세자가 자동으로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
- 신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6일부터 투자 소득과 자산 매각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어 개인 투자자와 기업주들의 세부담이 가중됨
 - 기본세율(Basic Rate) 구간의 배당세율은 8.75%에서 10.75%로, 고세율(Higher Rate) 구간의 배당세율은 33.75%에서 35.75%로 각각 2%p 인상 (배당 소득 공제 한도는 £500로 유지됨)

40)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10495/>

41) <https://moneyweek.com/personal-finance/tax-year-changes-new-hik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wg2-further-guide-to-payee-and-national-insurance-contributions/2026-to-2027-employer-further-guide-to-payee-and-national-insurance-contributions>

- 자본이득세(CGT) : 기업 자산 매각 시 적용되는 비즈니스 자산 처분 구제 세율이 기존 14%에서 18%로 상향 조정되어, 기업 매각을 통한 자본 회수 비용이 대폭 상승
- 자본이득세(CGT) 면제 한도 축소와 배당세율 조정이 동시에 시행되어 자산가들의 투자 심리 위축 및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한 행정적 모니터링이 강화
- 이번 회계연도의 조세개편은 근로 소득과 자본 소득 간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책적 시도이나, ISA(개인저축계좌) 등 비과세 상품 및 외부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상존

■ (4.9.) 공공부채 GDP 대비 100% 임계점 도달 및 ‘재정 준칙’ 재설계 논의 본격화⁴²⁾

- 통계청(ONS)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의 공공 부문 순부채가 GDP의 약 98.4%를 기록
 - 심리적·경제적 마지노선인 100%에 근접하며 국가 신용등급 및 재정 운용에 적신호가 켜짐
 - 고금리 환경에서 부채 상환 비용이 국방 및 교육 예산을 합친 금액과 대등한 수준으로 급증
 - 이로 인해 정부가 약속한 ‘공공 서비스 투자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사이의 정책적 상충(Trade-off)이 극단적으로 발생
- 이에 따라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프레임워크 도입 논의가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
 - 학계 및 런던 금융가(The City)에서는 현행 ‘5년 내 부채 감소’라는 재정 준칙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
 - 특히 최근 중동이슈로 인해 외교·안보 리스크로 인한 긴급 전비 지출 가능성까지 상존하여 차기 예산 편성 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나 추가적인 세원 발굴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

42) <https://www.bishopfleming.co.uk/insights/spring-statement-2026-summary-what-you-need-know>



프랑스

(1) 경기 및 경제성장률 전망

□ (1.30.) 통계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⁴³⁾

- 통계청(INSEE)은 2025년 4분기 경제성장률과 2025년도 연간 경제성장률 1차 추정치를 발표
- 프랑스의 2025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0.2%로 나타났으며, 2025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0.9% 성장
 - 3분기 경제성장률 0.5% 성장에 이어 4분기 성장세는 0.2%로 다소 둔화
 -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4년 1.1%, 2023년 1.6% 대비 낮아졌으나 기대 수준에 대체로 부합
- INSEE와 프랑스 정부는 2026년 초 국내 경기 및 대내·외적인 재정 불확실성에 주목하여 향후 경제정책을 조정할 예정
 - 전월 대비 가계 재화 소비지출은 11월 0.3% 감소에 이어 12월 0.6% 감소
 - * 제조품 소비의 급격한 하락이 원인

□ (3.24.) 프랑스 통계청(INSEE), 상반기 물가 상승 및 성장 둔화 전망

- 프랑스 통계청(INSEE)은 2026년 상반기 프랑스 경제가 물가 상승 압력 확대와 성장 둔화를 동시에 겪을 것으로 전망
 - 2025년 12월 전망에서는 상반기 성장률을 1.0%로 보았으나, 3월 24일 수정 전망에서는 0.9%로 하향 조정했으며, 6월까지 1·2분기 성장률은 각각

43)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6/01/30/la-croissance-francaise-en-hausse-de-0-2-au-quatrieme-trimestre-2025-et-de-0-9-sur-l-ensemble-de-l-annee_6664707_3234.html

- 0.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2월 0.9%까지 낮아졌던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봄철 2%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 제기
-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재정긴축은 가계 구매력 및 공공수요를 제약할 가능성 존재
 - 연초 임금협상에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6월까지 가계 구매력은 0.2%, 소비단위 기준으로는 0.5% 감소할 것으로 분석
 - 최근 3년간 프랑스 성장의 절반을 뒷받침해 온 공공수요는 재정긴축에 따라 약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상반기 경제활동은 소비와 공공수요보다 대외수요와 수출 중심으로 지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2) 2026년 예산안 확정과 재정여건

■ (2.2.) 프랑스 의회 2026년 예산안 확정 및 재정적자 축소 목표 조정(4.7 → 5.0%)⁴⁴⁾

- 프랑스 의회는 2026년도 국가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수개월 지속된 재정 교착 상태를 해소
 - 수개월간의 초당적 협상 실패 후, 르코르니 총리는 의회 표결을 우회하는 헌법조항을 발동, 사회당에 타협안 제공 등을 통해 불신임 투표를 극복
 - 2026년 예산안은 프랑스 헌법재판소 심사 및 승인을 받은 직후 발효될 예정
- 정부의 2026년도 재정적자 축소 목표는 당초 GDP 대비 4.7% 수준이었으나, 정당들의 정책적 요구 수용 후 재정적자를 GDP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
 - 2025년 추정치 5.4%에서 감소한 5.0%로 목표, 당초 목표치였던 4.7%에서는 후퇴
- 재정적자 축소는 세금 인상, 지출 절감을 통해 재정 목표치 달성 예정

44) <https://www.reuters.com/business/what-is-frances-2026-budget-2026-02-02/>

- 주요 세입 조치 : 매출 10억 유로 이상 기업에 대한 추가세, 부유세, 고소득 임시세 연장 등
- 주요 지출 절감 : 당초 목표인 170억 유로 대비 대폭 삭감한 90억 유로로 축소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에 적용)
- * 국방 예산은 다년도 군비증강 계획의 일환으로 65억 유로 추가 증액

■ (2.19.)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증세 여력 한계로 인한 지출 삭감 불가피⁴⁵⁾

-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2026년 재정적자 목표가 매우 불확실(highly uncertain)하다고 평가함
 - 당초 4.7%에서 완화된 5.0% 목표조차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
 - 사회보장예산에서 계획된 주요 절감 조치가 폐기·완화되면서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 확대
- 프랑스는 이미 유로존 내에서도 조세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향후 추가 증세보다 지출 절감이 불가피한 상태임
 - 2026년 예산은 약 12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세입 조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미 유로존 최고 수준의 조세부담을 고려할 때 향후 지출 절감이 불가피하다고 평가* 특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부과를 거의 전면적으로 연장한 점을 지적
 -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부채는 GDP 대비 118.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차입비용 상승에 더 취약해지며, 2020년대 후반에는 긴축 재정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3.27.) 프랑스, 2025년 재정적자 개선에도 대규모 에너지 지원책은 배제

- 프랑스의 2025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5.1%로 집계되어, 2024년 5.8% 대비 개선
 - 프랑스 통계청(INSEE), 2025년 공공지출 증가율은 2.5%로 전년(4.0%)보다 둔화, 세수는 증세 조치 등의 영향으로 3.9% 증가

45) <https://www.reuters.com/business/french-tax-hikes-tapped-out-spending-cuts-inevitable-says-audit-office-2026-02-19/> (접속일: 2026-03-13)

- 2025년 프랑스 공공부채는 GDP 대비 115.6%로, 2024년 112.6%에 비해 상승
- 프랑스 정부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에너지 지원보다는 한시적·표적 지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정부는 운송업, 농업, 어업 등 비용 부담이 큰 부문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지원 지속 여부는 월 단위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 관련 지원은 추가 지출 삭감 등을 통해 상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

■ (4.3.) 차입비용 상승으로 유류세 추가 세수 효과 상쇄

-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프랑스의 유류세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국채 차입비용 상승으로 재정상 효과가 대부분 상쇄
 - 2026년 3월 프랑스는 유류세 수입이 약 2.7억 유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같은 기간 정부 차입비용은 월 약 3억 유로 증가하여, 추가 세입 효과를 사실상 흡수
 - 운송·어업·농업 부문 지원과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총 추가 재정 부담은 월 약 4억 3천만 유로 수준으로 확대

(3) 물가

■ (3.10.) 프랑스, 유가 상승에도 재정 여력 부족으로 대규모 지원책 배제⁴⁶⁾

- 프랑스 정부는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새로운 ‘가격 방어막 (bouclier tarifaire)’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힘.
 - 모드 브레종(Maud Bregeon) 에너지 담당 장관 겸 정부 대변인은 연료 구매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trop tôt)고 강조

46) https://www.lemonde.fr/en/economy/article/2026/03/10/france-has-no-budgetary-leeway-to-counter-rising-fuel-prices_6751280_19.html?search-type=classic&ise_click_rank=1 (접속일: 2026-03-13)

- 또한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다(inconceivable)”고 밝히며, 에너지 제품 전반의 VAT를 5.5%로 인하할 시 170억 유로의 재정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
 - 프랑스 정부의 대응은 주유소 가격 점검 강화 및 전략비축유 활용 검토 등 제한적 조치에 그침
 - 세바스티앙 르코르뇌(Sébastien Lecornu) 총리는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 방지를 위해 가격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 또한, 프랑스 정부는 G7 국가들과 함께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⁴⁷⁾
-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충격이 장기화 될 경우, 근본적 대응책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 제기

47)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6/03/09/liberer-les-stocks-strategiques-de-petrole-l-arme-envisagee-par-le-g7-pour-calmer-les-marches_6670087_3234.html (접속일: 2026-03-13)



일본

(1) 신임 총리 취임 이후 확장적 재정운용 방향

■ (12.25.) 총리, 차기 예산에서 재정규율 강조,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시장 우려 완화 노력⁴⁸⁾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각 관료들에게 차년도 4월에 시작되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부채의존도를 제한하여 재정 규율을 유지할 것을 강조
 - 차년도 예산은 총 122.3조 엔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나,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6조 엔으로 제한하여 2년 연속 30조 엔 이하를 유지할 계획
- 부채의존도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24.2%까지 낮추어, 재정규율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보장하면서 강력한 일본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균형을 맞추어갈 것을 선언
- 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의 별도 연설에서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규모에만 의존하는 무분별한 지출 확대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지출을 의미함”을 언급

■ (2.9) 집권당 압도적 총선 승리에 따른 일본 증시 최고치 경신⁴⁹⁾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일본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
 - 9일 기준 닛케이 225 평균 주가 4.4% 급등, 토픽스 지수 약 2.3% 상승

* 토픽스 지수 : 도쿄 증권거래소 1부 상장 전체 종목의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지수

48)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japan-pm-stresses-fiscal-discipline-next-years-budget-with-lower-debt-reliance-2025>

49) hankyung.com/article/202602094865i

- 다카이치 트레이드와 일본 총리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조, 재무장관의 엔화 동향에 대한 경고 및 개입가능성에 대한 발언 이후 일본 채권, 엔화는 하락이 제한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세
 - 엔화는 달러대비 0.2% 상승한 156.85를 기록,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545%로 마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27%(4.0bp 상승)
 - * 다카이치 트레이드 :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위해 부채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일본 주식을 매수하고 채권, 엔화 등을 매도하려는 움직임
- 경제전문가들은 일본 집권당 총선 압승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박 감소로 일본 증시와 재정정책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
 - 일본 은행이 4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6월 회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한 단기 채권 수익률, 익일물 인버스 스왑 등이 총선 전보다 조정
 - * 익일물 : 금융기관 간 초단기 자금 거래에서 거래 다음날(익일)에 자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적용되는 금리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투자계획 추진 가능성 등이 증가

□ (2.18.)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 2.0 운영의 경제·재정정책 최우선 과제 발표⁵⁰⁾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내각 출범 첫 개회사에서 단기적으로는 세제 개혁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해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공공 재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함
 - 예산 및 세제 개혁으로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제 개혁 법안을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
 - 또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국민 부담을 덜고, 사회보장과 과세 시스템을 재설계하려는 의지를 표명

50) 일본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Press Conference by Prime Minister TAKAICHI Sanae" (2026.2.18.). <https://japan.kantei.go.jp/105/statement/202602/18kaiken.html>

-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 전략적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예산 편성 방식을 개편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
- 외교·안보 전략으로는 새로운 전쟁 형태에 긴급히 대응하고 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
 - * 정보 분석 역량을 높이고, 위기 발생 전에 예방하며, 전략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정치적 결의와 비전으로서 일본을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핵심 수단을 제시함.
 - 젊은 세대가 미래를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속에서 이러한 경제·재정정책을 중심축으로 설정
 - “도전을 받아들이는 결단력과 진보의 내각”으로서 강하고 번영하는 일본을 실현하겠다고 강조

(2) 정책금리 조정

▣ (12.19.) 일본은행, 12월 통화정책회의 결과 단기 정책금리 0.75% 인상⁵¹⁾

- 일본은행(Bank of Japan)은 2025년 12월 19일 통화정책회의 결과로 정책금리와 포워드 가이드스*를 유지하며, 통화정책 방향과 경제 상황의 변화가 없음을 발표
 - * 포워드 가이드스 :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또는 기준금리의 향방에 대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 다만,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할 것을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결정(12. 22. 적용)
-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2%)의 지속적·안정적 달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금리는 여전히 상당 폭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설명해 마이너스

51) https://www.boj.or.jp/en/mopo/mpmdeci/mpr_2025/k251219b.pdf

금리정책 조기 종료 관측을 경계하며, 완화적 금융 여건은 유지된다는 메시지를 병행

- 일본 경제의 최근 지표를 고려할 때, 임금과 물가 모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
- 장기간 이어진 급격한 통화완화 정책에서 정상화로 진행되는 과정은 엔화·국채 금리·주식시장에 직접 파급될 여지가 있으며, 일본 내 임금-물가 선순환(임금 인상 지속 가능성)이 향후 추가 인상 여부의 핵심 조건으로 작동 가능할 것으로 전망

(3) 경제 상황 진단 및 전망

■ (1.22.) 내각부, 경제·재정 자문회의를 통한 전망 논의⁵²⁾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6년 첫 경제·재정 자문회의 주재를 주재하여 내각부가 제시한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주요 논의 사항으로 그 간의 주요 성과를 제시하고 경제성장 및 현재 재정 상황에서의 위험 요인과 정책 방향을 공유
- 주요 성과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제·재정 관리를 통해 28년 만에 재정 흑자 달성을 제시
 - 2025년 추경 이후 국채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축소, 2026년 예산에서 신규 국채 발행액을 30조 엔 이하로 유지(2년 연속 축소)
 -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제 및 재정 관리 수행을 통해 28년 만에 재정 흑자를 달성
 - * 2026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최소 수준으로 균형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후 일정한 흑자 유지를 예상

52)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Meeting of the Council on Economic and Fiscal Policy".
<https://japan.kantei.go.jp/104/actions/202601/22keizai.html>

-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지방정부 부채비율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을 전망
- 경제성장 및 재정 상황에서 위험 요인으로 높은 부채비율과 금리 상승기 위협 등을 제시
 - 재정 상황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GDP 대비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
 - 금리 상승기 이자 지급 부담 증가 가능성 존재
- 정책 방향은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재정” 기초를 유지하여 경제·재정 통합 개혁을 추진하고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회계연도별 재정 흑자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정책을 다년간에 걸친 흑자 균형을 점검하는 정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

■ (1. 23.) 중앙은행, 경제활동 및 물가 전망 발표⁵³⁾

- 일본 중앙은행(BOJ)은 세계 경제가 성장세로 복귀하고 정부의 경제 대책과 완화적인 금융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일본 경제는 앞으로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약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2% 미만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변동성이 큰 물가지수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물가안정 목표치인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함

53) 「経済・物価情勢の展望 (2026 年 1 月)」, <https://www.boj.or.jp/en/mopo/outlook/gor2601b.pdf>

- 일본 경제 활동과 물가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
 - 경제 상황은 각 관할구역의 무역과 기타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해외 경제 활동과 물가 개선, 기업 임금과 물가 책정, 금융 및 외환 시장 발전 등의 주의가 필요
- 중앙은행은 2%를 목표로 하는 정책금리로 통화정책을 운용
 - 경제활동과 물가 개선에 맞춰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통화 완화 수준을 조정할 것임
 - 통화정책위원들의 실질 GDP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은 다음과 같음(실제 수치와 전망 수치)
 - * 실질 GDP : 2022년 1.4%, 2023년 -0.0%, 2024년 0.5%, 2025년 0.9%, 2026년 1.0%, 2027년 0.8%
 - *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 : 2022년 3.0%, 2023년 2.8%, 2024년 2.7%, 2025년 2.7%, 2026년 1.9%, 2027년 2.0%

□ (2.1.) 일본 내각부, 2월 월간 경제보고서 발표⁵⁴⁾

- 경제보고서에서 일본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 회복을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 무역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있음
 - 민간 소비는 회복 추세를 보여주며 기업 투자가 다소 증가하나, 수출과 산업 생산은 정체*
 - * 2025년 3분기 GDP가 -2.3%로 감소했으나 이는 일시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미국 자동차 관세, 주택투자 감소 등)
 - 일본 정부는 향후 비용상승형(cost-push) 인플레이션에서 임금주도형(demand-pull)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을 목표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2.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

54) 일본 내각부(Cabinet Office), "Monthly Economic Report" (2026.2.). <https://www5.cao.go.jp/keizai3/getsurei-e/2026feb.html>; "Recent Developments in the Japanese Economy: January 2026". <https://www5.cao.go.jp/keizai3/getsurei-e/reference/reference20260129.pdf>

- 65세 이상 고령층 노동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전체 고용률이 80%에 달하는 등 고용은 개선되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도 회복세가 지속되나, 추가적인 노동 공급 확대 여력은 제한
- 단기적 전망으로는 고용 및 소득 상황 개선과 정책 효과 등이 중간 정도의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격 변동과 미국 무역정책 상황 등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하방 위험과 금융 및 자본 시장의 변동성에 주의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는 “강한 일본경제”를 목표로, 물가 상승 대응 및 생활 안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국방·외교력 강화 등을 포함한 경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일본은행과 경제 및 물가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한 정책 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
 - 은행이 경제 활동, 물가, 금융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통화정책 관리를 통해 임금과 물가 간의 선순환을 확인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 (3.31.) 내각부, 3월 월간 경제보고서 발간⁵⁵⁾

- 민간소비 회복세, 기업투자 완만한 증가 미국 무역 영향 기업의 이익 개선 등 일본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
 - 수출은 거의 변동 없으며 산업 생산은 정체 상태이나, 고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
- 단기 전망으로는 고용 및 소득 상황의 개선과 정책의 효과가 완만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정세의 영향을 예의주의할 필요 상존
 - 금융 및 자본 시장의 변동과 미국의 무역 정책 상황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

55) 일본 내각부(Cabinet Office), “Monthly Economic Report” (2026.3.). <https://www5.cao.go.jp/keizai3/getsurei-e/2026mar.html>

- 정부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공공재정’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여 “강한 일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을 보호하면서 일본 경제를 회복할 예정
 - 이를 위해 “강력한 일본 경제 구축을 위한 종합 경제 대책”과 2025년도 추가 경정예산을 신속히 시행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
 - * 강력한 일본 경제 구축을 위한 종합 경제 대책은 ① 국민 생활 속 안전 보장 : 물가 상승 대응 방안 ② 잠재적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 : 성장 지향적 투자를 통한 견고한 경제 구축 ③ 국방력과 외교력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함
 - 중동 정세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연료유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국가 석유 비축량을 방출하기로 결정
 -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 및 물가 변동에 대응하여 유연한 정책 운용을 위해 긴밀히 협력
 - 정부는 중앙은행이 경제 활동, 물가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화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2%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4) 통화정책

□ (3.19.) 중앙은행(BOJ), 통화정책 성명서 발표⁵⁶⁾

- 일본 중앙은행 정책위원회 통화정책 회의 결과, 정책금리는 0.75%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지만 물가 목표 2% 달성을 위해 경제·물가·금융 상황에 따라 점진적 금리 인상을 고려할 방침을 발표

56) 일본 중앙은행(Bank of Japan),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2026.3.19.). https://www.boj.or.jp/en/mopo/mpmdeci/mpr_2026/k260319a.pdf; “Summary of Opinions at the Monetary Policy Meeting on March 18 and 19, 2026” (2026.3.30.). https://www.boj.or.jp/en/mopo/mpmsche_minu/opinion_2026/opi260319.pdf; Reuters, “Bank of Japan chief signals vigilance to yen moves, impact on economy” (2026.3.30.).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boj-watching-fx-movement-factor-affecting-economy-governor-ueda-says-2026-03-30/>

- 정책위원회는 찬성 8명(UEDA Kazuo 총재 포함), 반대 1명으로 투표하여 기준금리를 결정
 - *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1.0%로 제안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설명함
- 우에다 총재는 최근 엔화 환율 변동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비용상승이 향후 몇 달 안에 금리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시사
 - *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160엔 아래로 떨어져 2024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실질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고려할 때, 지난 2026년 1월 ‘전망 보고서(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Prices)’에서 제시한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되어 간다면, 정책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금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 경기 상황은 일부 부문에서 약세를 보이거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물가 동향은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최근까지 2% 상회 하는 수준에서 움직였으나 현재는 약 2% 정도로 둔화된 상태
 - 수출과 산업 생산은 전반적으로 정체된 상태이며 기업 이익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조업에서는 관세 영향으로 다소 하락
 - 기업 투자는 증가 추세이며, 주택투자는 감소 추세, 공공투자는 대체로 제자리, 금융 환경은 여전히 완화적인 상태
 - 민간 소비는 고용 및 소득 개선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특히 식료품) 압력에 영향
 - 임금 상승이 물가에 전가되는 흐름으로서 근원물가상승률은 2% 초과하며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조치로 약 2% 수준으로 둔화

- 향후 경제 전망은 소득에서 지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강화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일시적으로 2% 미만으로 둔화될 가능 존재
 -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 금융 및 자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최근 원유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임금과 물가가 상호작용하며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조로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있고 중장기 물가상승률 기대 상승으로 기저 물가 상승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중국

(1)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 (12.11.) World Bank, 중국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⁵⁷⁾

- 세계은행(World Bank)은 Advancing Reforms Enhancing Prospects를 통해 기존 4월 발간 보고서 대비 중국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을 4.9%로 조정
 - 이는 2025년 4월 보고서 4.0% 대비 0.9p 상승한 수치로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인한 내수경제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조정임
- 반면, 2026년 성장률은 주택과 노동시장 악화에 따른 가계소비심리 위축을 반영한 4.4%로 전망하여, 2025년 대비 낮은 성장 전망을 예상
 - 부동산 수익 악화, 지방정부 긴축 재정정책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 우려, 제조업 및 인프라 투자 둔화 등을 고려

■ (1.19) 2025년 GDP 5.0% 성장 목표 달성 및 4분기 성장률 4.5% 둔화⁵⁸⁾

- 국가통계국(NBS)은 중국의 연간 GDP가 전년대비 5.0% 증가해 정부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발표
 - 2025년 연간 GDP는 140조 1,87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은 38조 7,911억 위안 규모로 4.5% 수준에 그쳐 3분기 4.8% 대비 둔화*

* 2022년 이후 최저 수준

57) World Bank, Advancing Reforms Can Enhance Prospects – China Economic Update(2025. 12. 11)

58) <https://www.cnbc.com/2026/01/19/china-q4-gdp-growth-2025-target-retail-sales-industrial-output-investment-income-employment.html>

- 분기별 추이는 1분기 5.4%, 2분기 5.2%, 3분기 4.8%, 4분기 4.5%로 지속적인 약화가 식별
- 중국 정부의 수출 중심 성장구조와 부동산 침체와 소비·투자 약세 등에 따른 내수 부진 속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 디플레이션 압력 가중
 - 12월 소비 판매는 +0.9%, 고정자산 투자는 연간 +3.2% 수준, 생산자 물가 (PPI)의 경우 -1.9%로 디플레이션 압력 가중
 - 고용시장의 경우, 도시 실업률은 5.1%로 안정적 수준이나, 청년 실업률이 15% 수준을 유지하여 중국 내 지속적인 문제로 정착
- 중국 정부의 고품질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지만, 민간 투자 및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재정, 통화 부양 의존도 상승이 우려

■ (1.29) 지방정부, 2026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⁵⁹⁾

- 중국 31개 성(省)급 지방정부 중, 성장 목표를 발표한 29개 지역 중 19개 지역이 2025년에 비해 경제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함
 - 이는 중국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 목표를 4.5~5.0%로 설정한 여파에 따른 결과이며, 부동산 시장위기, 무역 갈등 및 산업 과잉 등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며 성장률 약화로 연결
 -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는 성장목표를 5.0%로 유지, 광둥성 등 3개 성은 4.5~5.0% 사이에서 목표치를 조정, 나머지 4개 성은 4.5%까지 목표치를 하향 조정
- 지방정부 성장률 목표치 조정은 재정지출과 국영은행 대출 확대 등 중국 재정 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시진핑 주석, 예산 규모 대비 저성과 프로젝트, 과도 지출에 따른 경제적 성과 왜곡을 경계하고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 촉진을 강조

59) <https://ft.com/content/7ccb65e3-b003-4ac6-8bce-a5037c2c7d71> (Financial Times, Chinese economy)

- 중국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수출이 단기적으로 감소하더라도 경기부양 정책에 적극 개입하여, 5.0%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맥쿼리)
- 지방정부별 목표치의 전반적 감소는 중국정부가 국가 목표치와 동일한 조치를 각 지방정부에도 취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해석

(2) 금융정책 방향

■ ('26.1.6.) 인민은행(PBoC), 2026년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의지 표명(유동성 지원)⁶⁰⁾

- 중국인민은행은 2026년에 지급준비율(RRR)과 금리인하를 통해 완화된 통화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중국인민은행은 12월 중국 내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의 약속을 반영하여 경기 대응 및 경기순환 간 조정 강화, 내수 활성화, 공급 개선, 금융위험 완화 등 안정적 성장 지원을 통한 새로운 5개년 계획 시작을 공표
- 또한, 중국인민은행은 7개월 연속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하고,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 균형적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표명
- 중국인민은행의 발표는 경기부양과 금융여건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 신호로, 기업·가계 신용,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구조적 리스크 관리로 해석되며, 환율 안정 등은 향후 자본흐름과 대외금융 위험관리를 통한 국채금리, 대출금리, 신용스프레드 동반 조정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

60)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s-central-bank-pledges-cut-rrr-interest-rate-2026-2026-01-06/>

(3) 중기 경제 및 정책 방향

□ (3.12.) 중국정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발표

-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2026년 경제 성장률 목표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주요 내용이 제시됨⁶¹⁾

* 인민정치협상회의 : 중국 공산당의 정책결정에 앞서 가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중국 최고정책자문기구

** 중국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헌법 재정, 국가예결산의 심사·승인 등의 권한을 보유

- 2026년 경제 성장성장률 목표치는 4.5~5%로 설정하였으며 내수 진작, AI, 첨단제조업, 과학기술 자립이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함.

- 전년 5.0%보다 낮은 수준으로 1991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로 평가

- 2026년 과학기술 지원 예산은 약 1.3조 위안 예정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책정⁶²⁾

*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는 2% 내외, 도시조사실업률 목표치는 5.5% 내외로 전년대와 동일

- 외신은 중국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성장둔화에 대응해 기술강국 전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⁶³⁾

□ (3.26.) 중국, 전국 단위 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방안 발표⁶⁴⁾

- 중국 국무원과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장기요양보험제도 구축을 가속화하는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단위의 통합 장기요양보험 체계를 본격 추진을 결정

* 장기요양보험은 장기간 스스로 돌보기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돌봄과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제도

61) https://english.www.gov.cn/2026special/2026npcandcpcc/202603/05/content_WS69a8ea_12c6d00ca5f9a0987b.html

62) https://english.www.gov.cn/news/202603/06/content_WS69aadad8c6d00ca5f9a09aa5.html

63)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parliament-approve-growth-policy-plans-amid-growing-us-rivalry-2026-03-04/>

64) https://english.www.gov.cn/policies/latestreleases/202603/26/content_WS69c48692c6d00ca5f9a0a1aa.html

- 중국은 2016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3억 1천만 명이 제도에 가입했으며 330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
- 지급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증 기능장애인으로, 정부는 3년 안에 전 국민을 포괄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
- 이번 조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⁶⁵⁾
 - 중국은 양회에서 연금재원, 돌봄, 노인복지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직후 해당 제도를 발표했으며, 중국 정부도 이를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설명
 - 2035년에는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 요양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
- 재원은 고용주·개인·정부 보조금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며, 보험료율은 소득 기준 약 0.3% 수준으로 제시
 - 이는 중국의 사회지출이 단순 경기부양을 넘어 돌봄·복지 중심의 구조적 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⁶⁶⁾

65)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china-launches-long-term-care-insurance-system-alleviate-aging-challenges-2026-03-26/>

66)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china-launches-long-term-care-insurance-system-alleviate-aging-challenges-2026-03-26/>

Ⅱ. 국제기구

OECD 58

IMF 64

국제기구 재정동향은 월간 「나라재정」의 각월호의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편집한 것임.



OECD

□ (25.12.15.) G20 국가 2025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⁶⁷⁾

- G20 국가 중 자료가 가용한 16개국의 202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혼재 양상
 - * 이번 발표의 마감일 기준으로 미국의 2025년 3분기 GDP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전체 시계열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G20 국가와 OECD 회원국 집계에서 미국을 제외⁶⁸⁾
 - 2025년 2분기 대비 3분기 GDP 성장률은 상승 7개국, 하락 7개국, GDP 감소 2개국으로 확인
 - G20 국가들의 202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의 0.7%에서 소폭 상승한 0.8%(잠정치)를 기록(표 참조)
- 캐나다의 202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 -0.5% 대비 3분기 0.6%까지 강하게 반등하였으며, 이탈리아의 GDP 성장률도 2분기 -0.1%에서 3분기 0.1%로 전환
- 2025년 3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은 2분기 0.7%에서 1.3%로 크게 상승하였고, 프랑스(0.3% → 0.5%)와 인도(1.8% → 2.0%), 중국(1.0% → 1.1%)의 GDP 성장률은 다소 완만하게 상승
- 반면, 다른 G20* 국가들은 3분기에 2분기 대비 성장 둔화 또는 감소를 경험
 - 일본의 GDP는 0.6%, 멕시코의 GDP는 0.3%만큼 감소
 - 사우디아라비아(1.9% → 1.4%), 튀르키예(1.6% → 1.1%), 남아프리카(0.9% → 0.5%), 호주(0.7% → 0.4%)의 GDP 성장이 둔화하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영국은 소폭 둔화(원문 표 참고)

67) OECD, "G20 GDP growth shows a mixed picture across G20 countries in the third quarter of 2025", 2025.12.15.,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12/g20-gdp-growth-third-quarter-2025.html>

68) 미국의 2025년 3분기 GDP 자료는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일정에 따라 2025년 12월 23일에 발표될 예정. 2024년 자료 기준으로 미국의 명목 GDP는 G20 GDP의 19.3%, OECD GDP의 34.1%를 차지함.

표 G20 국가의 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백분율 변화, 계절조정 자료)

(단위: %)

국가명	2023년			2024년			2025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G20*	0.6	0.5	0.7	0.6	0.8	0.8	0.8	0.7	0.8
OECD*	0.0	0.2	0.4	0.3	0.5	0.4	0.5	0.4	0.3
EU	0.1	0.1	0.3	0.3	0.4	0.5	0.5	0.3	0.4
유로지역	0.0	0.1	0.3	0.2	0.4	0.4	0.6	0.1	0.3
중국	1.6	0.8	1.3	1.0	1.5	1.5	1.2	1.0	1.1
프랑스	0.2	0.4	0.1	0.2	0.4	0.0	0.1	0.3	0.5
독일	0.0	△0.3	△0.1	△0.3	0.0	0.2	0.3	△0.2	0.0
이탈리아	0.0	0.2	0.1	0.2	0.0	0.2	0.3	△0.1	0.1
일본	△1.4	0.4	△0.5	0.2	0.7	0.3	0.4	0.5	△0.6
한국	0.8	0.5	1.2	△0.2	0.1	0.1	△0.2	0.7	1.3
영국	△0.2	△0.3	0.8	0.6	0.2	0.2	0.7	0.3	0.1
미국	1.2	0.8	0.2	0.9	0.8	0.5	△0.2	0.9	..

주: 1. 러시아의 GDP는 2021년 4분기 이후 신뢰할 만한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아 G20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G20 총계는 가중치를 조정

2. G20* 합산 수치는 아프리카 연합(the African Union)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OECD, "GDP growth shows a mixed picture across G20 countries in the third quarter of 2025", Table 1, p2, 2025.12.15.

■ (12.23.)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in OECD countries 보고서 발간

- 2025년 12월 23일, OCED 회원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비정기 정책 분석보고서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in OECD countries'를 공개
- (배경) 현재 OECD 각 국가는 부채 감축 등 재정 건정성 회복과 더불어, 미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 완충 장치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회복을 위한 "이중 부담"에 직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의 평균 정부 부채 비율은 2007년 대비 40% 포인트 이상 증가,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에도 OECD 35개 국가 중에서 16개 국가가 부채 수준 악화 및 부채 감축 어려움에 직면
 - 인구 고령화, 국방비 증가, 기후 대응 및 전환 지출,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수요 대응 증가

- (주요 연구내용) OECD 각 국가가 직면하는 이중 부담 해결을 위해, 선도 국가들*의 지출 구조 혁신 사례와 재정 규칙 유지 사례를 탐구하여 향후 중장기 재정 운용 방향을 권고

* 호주, 캐나다, 독일, 스위스, 영국

- 디자인 관점 : 효율성 향상, 재량지출 감소,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출 등 여러 목표를 동시 추구
- 재정기관 관점 : 정부 차원의 지출 검토는 단순한 지출 효율화 측면을 넘어 전체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출 검토로 발전
- 소통 측면 : 통합·배분에 대한 소통에 기반하는 전략적인 선별과 지출 조정을 통해 전면 삭감을 방지, 국가 기능을 재설계
- (제언) 지출 검토의 고도화, 구조적 지출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 재정기관의 독립적 지위 확보 및 감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이중 부담 해결을 도모

■ (1.25.) 2025년 3분기 고용률 발표

- OECD 국가의 고용률은 2025년 3분기에도 사상 최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전체 고용률은 2025년 3분기 기준 70.3%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의 역대 최고치 기록
 - 16개국에서 고용률 유지, 12개국에서 하락, 9개국에서 상승
 - * 한국의 2025년 3분기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
-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고용 안정성을 뒷받침
 - OECD 기준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74.1%로 사상 최고 수준 유지
 - OECD 국가 중 약 3분의 2 이상이 해당 수준을 상회
 - *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9%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지속
- 2025년 11월 OECD 국가의 실업률은 5.0%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 유럽연합 실업률은 6.0%, 유로지역은 6.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점진적 안정세 유지

* 한국의 실업률은 2.6~2.7% 수준으로 OECD 평균을 크게 하회

■ (2.9) 2025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발표

- 2025년 12월 OECD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한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은 2025년 12월 기준 3.7%로 전월(3.8%)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 OECD 38개국 중 13개국에서 물가상승률 하락, 9개국에서 상승, 16개국에서 대체로 안정적 수준
 - *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3% 내외 수준으로 OECD 평균(3.7%) 대비 낮은 수준
 - 식품·에너지 물가와 근원물가(식품·에너지 제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에너지 물가는 하락
- G7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
 - G7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2025년 12월 기준 2.4%로 전월(2.5%) 대비 소폭 하락
 - 일본은 연료 보조금 도입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전월 대비 0.8%p 하락
 - 독일의 물가상승률은 0.5%p 하락한 반면, 캐나다는 2024년 말 일시적 세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

■ (3.4.) 글로벌 부채 보고서 2026 발표⁶⁹⁾

- 2026년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의 시장성 차입 규모가 2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차입 증가의 배경으로 국가의 재정조달 수요 확대와 기업의 채권시장 활용 증가를 제시
 - * 이는 2024년보다 4조 달러(17%) 증가한 수준이며, 10년 전의 두 배에 해당

69)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global-debt-report-2026_e9d80efd-en.html

- OECD는 차입 규모 증가 자체뿐 아니라, 높은 조달 금리와 장기채 발행 비중 축소에 따른 차환 위험 확대, 가격 민감도가 높은 투자자 및 레버리지 투자자 비중 확대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
 - 2025년 OECD 국가의 중앙정부 차입 중 약 13.5조 달러가 기존 부채 차환용이었으며, 이는 총차입의 약 80%에 해당
 - 최근 일부 국가가 높은 장기금리를 피하고자 발행 만기를 단축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 차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
 - 대규모 AI 투자 수요의 상당 부분이 외부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기술기업이 회사채 시장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
 - * 2025년 9개 주요 AI 기업은 채권시장에서 1,220억 달러를 조달, 이들의 2026~2030년 누적 자본지출 계획은 4.1조 달러로 추정
- OECD는 부채 부담이 커지는 환경에서 정부와 기업의 차입이 단기적 자금 조달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과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정부에는 건전한 재정운용, 부채의 지속가능성 확보,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

▣ (3.26.)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⁷⁰⁾

- 최근 중동 지역 갈등과 에너지 공급 차질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고 진단
 - 세계 성장률은 2026년 2.9%, 2027년 3.0%로 전망하고, G20 물가상승률은 2026년 4.0%, 2027년 2.7%로 제시
 - 한국은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구조로 2026년 성장률은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

70) OECD (2026),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6: Testing Resilie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d4623013-en>

- 특히 에너지 가격이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성장률은 더 낮아지고 물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
 - 비료, 알루미늄, 헬륨 등 주요 원자재와 산업 중간재 공급에도 충격이 확산될 수 있어, 에너지발 물가상승이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제기
 - 에너지 충격이 길어질 경우 세계 생산은 줄고, 소비자물가는 추가로 오를 수 있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
- 재정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광범위한 지원보다 취약계층과 피해 부문 중심의 선별적·한시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설명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일부 기업은 지원하되, 광범위한 보조금이나 가격 통제는 재정 부담이 크고 에너지 절약 유인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
 - 높은 국가부채, 고령화, 국방비 증가, 기후대응 비용까지 겹치고 있어 중기 재정계획 아래에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IMF

■ (1.19.)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⁷¹⁾

- 글로벌 경제는 다양한 요인 속에서도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6년 3.3%, 2027년 3.2%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지난 2025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WEO)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2026년 경제성장률은 소폭 상향(0.2%p) 조정되었고 2027년 경제성장률은 변동 없음
 - 기술 투자 증가, 재정·통화정책 운용, 민간 부문 적응력이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역풍을 최소화하였으며, 전 세계 물가상승률은 2026년 3.8%, 2027년 3.4%로 점진적 하락을 예상
 - * 북미아시아의 AI 투자와 완화적 금융 환경이 경제성장을 견인
- AI 과열된 기대, 무역 긴장,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세계 경제 전망은 여전히 하방 압력 위험 존재
 - AI 생산성 과도한 기대 시, 투자가 급감하고 금융시장 충격가능성이 존재
 -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경제활동에 더 큰 부담 초래
 - 지정학적 갈등 확대 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위험에 따른 세계 경제 혼란 가중 우려
 - 국가부채 증가, 재정적자 심화는 장기금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금융 여건에 악영향을 초래
- 재정 완충 및 수요 충격 대응, 통화정책 조정, 협력 등을 통한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71) IMF, "World Economic Outlook".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6/january/english/text.pdf>

- 긴급한 지출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완충 장치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과 중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요 충격에 대한 대응책 수립 필요

* 각국은 재정수입 확대, 지출 합리화, 민간 투자 유치 등 지출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경기 변동시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대응책 마련

- 물가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조정하고 독립성을 유지

*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명확하고 일관된 소통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헤쳐 나가는 데 매우 중요

- 무역 정책에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다자 협력을 강화*하며, 노동시장, 교육, 규제 체계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잠재적 생산량, 일자리 창출 촉진**

* 실질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일관된 무역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준수

** 나아가 기술 발전을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인공지능 도입·재생에너지 투자가 생산성 향상을 가속화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대에 핵심 요소

표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26년 1월 전망		2025년 10월 전망 차이	
	2026년	2027년	2026년	2027년
세계 경제(World Output)	3.3	3.2	0.2	0.0
선진국	1.8	1.7	0.2	0.0
신흥개도국	4.2	4.1	0.2	-0.1
세계 소비자물가(Consumer Prices)	3.8	3.4	0.1	0.0
선진국	2.2	2.1	0.0	0.0
신흥개도국	4.8	4.3	0.1	0.1

■ (2.25.) 미국과의 연례 협의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 발표⁷²⁾

- 2026년 미국과 Article IV 연례 협의에 대한 협의단 성명에서 미국의 최근 경제 성과와 재정 동향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한 권고 발표
 - IMF가 2026년 미국과의 Article IV 협의 임무 수행을 위해 미국 Scott Bessent 재무장관, 연방준비제도 Jerome Powell 의장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주요 의견을 논의
 - * 본 보고서는 IMF 직원들이 회원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IMF 집행위원회 승인 이전 예비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매년 회원국 경제를 점검하는 Article IV 협의의 일환으로 작성된 문서
- 미국 경제는 지난 2025년 1월 WEO 전망과 일치하는 좋은 성과를 보였으며, 생산성 향상 덕분에 단기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은 2.2%였으며, 2026년에는 2.4%로 소폭 상승 전망할 것으로 예상
 -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은 관세 영향으로 2026년 초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2027년 초에는 2%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2026년 1월 기준 4.3%로 완전고용에 근접
 - 금융 상황은 연중 대부분 여유롭게 유지되었으며,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 스프레드는 사상 최저치에 근접
 - 연방 재정적자는 2024 회계연도 GDP 대비 6.3%에서 2025 회계연도 5.9%로 감소
- 반면, 재정적자 확대·관세·이민·규제완화 정책이 중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
 - 재정적자는 2025년 GDP 대비 5.9%였으며, 향후 6%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은 2031년까지 14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72) 국제통화기금(IMF), "United States of America: Staf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26 Article IV Mission" (2026.2.25.).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6/02/25/cs-02252026-united-states-of-america-staff-concluding-statement-of-the-2026-article-iv-mission>

- 관세는 단기적으로 무역적자 축소 및 세수 확보 효과가 있으나, 공급 충격으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유발
- 이민 국경 단속 강화와 추방 증가는 향후 몇 년간 외국 출신 노동력 규모를 줄여 고용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금융·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 완화 추진 중이며, 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되나 구체적인 효과는 아직 불확실
- 미국은 경제적 자립과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정책을 재조정하고, IMF는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 무역파트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권고
 - 재정 건전성 확보로서 세수 확대 소비세 도입과 사회보장제도 및 메디케어 재조정 필요
 - 무역·관세 정책 개선으로서 무역파트너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여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역 제한과 산업 정책 왜곡을 조정하고 축소
 - 노동시장·이민 정책으로서 기술·역량 기반 이민 확대와 노동 공급 확충을 통한 성장 잠재력 강화
 - 분배·사회적 안정성으로서 저소득층 지원 확대(아동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 공제 강화)와 개인 저축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
- 이러한 대안들은 미국의 고용 증가와 노동력 참여 제고, 공공 부채를 하락세로 전환,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 감소, 빈곤 감소 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

■ (3.30.) 중동 전쟁이 에너지, 무역, 금융에 미치는 영향 기고⁷³⁾

- 중동 전쟁이 에너지 가격, 공급망,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치나, 영향력은 국가마다 차이 존재

73) 국제통화기금(IMF Blog), "How the War in the Middle East Is Affecting Energy, Trade, and Finance" (2026.3.30.).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6/03/30/how-the-war-in-the-middle-east-is-affecting-energy-trade-and-finance>.

- 각 국가에 비대칭적(asymmetric) 충격으로 작용하며, 특히 에너지 수입국이 수출국보다, 저개발 국가가 부유한 국가보다, 비축량이 부족한 국가가 비축량이 풍부한 국가보다 더 큰 위험
 - * 중동 전쟁은 에너지 시장을 통해 전 세계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공급망을 통해 실물 경제를 압박하며, 금융시장을 통해 성장 둔화를 심화시키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작용
- 에너지 가격은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로 세계 석유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혼란을 초래해 수입국들에게는 갑작스럽게 큰 소득세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초래
 - 특히 아시아 국가의 제조업 부문에서는 연료와 전력 요금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구매력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국제 수지 악화로 통화 가치가 하락
 - 반면,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석유 수출국은 높은 가격으로 대외적인 위치가 강화될 가능성 존재
- 원자재 가격 상승 외에도 비에너지 및 필수 소비재 분야에 대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으며, 세계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무역에도 또 다른 복잡성을 가중
 - 비료 운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식량 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연중 수확량과 작물 생산량에 위협을 가하고 따라서 식량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
 - 특히 저소득 국가의 국민들은 물가 상승 시 경제적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며 비료와 식량 가격 급등은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문제로 까지 비화
-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고 역사적으로도 유가 급등은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성장률을 낮추는 경향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겨우 근접한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다시 물가 압박으로 이어지며, 이 경우에도 국가마다 다른 양상

- 사람들과 기업들이 물가상승률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임금과 물가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
- 중동 전쟁은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주가는 하락했고, 주요 선진국과 많은 신흥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으며 변동성이 커졌으나, 국가별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 발생
 - 유럽과 많은 신흥 국가에서는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정부와 기업 모두 차환이 어려워지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동 및 남아시아의 일부 저소득 경제권에서는 이미 부족한 외환보유고와 제한적인 시장 접근성으로 인해 외부 충격이 자금 조달 환경에 더욱 큰 위협을 초래하고 중동 및 기타 지역에서는 높은 부채와 긴축적인 금융 여건으로 부채 조달 비용이 더욱 상승
 -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처럼 국내 자본 시장이 탄탄하고 자금이 충분한 일부 수출국 또는 브라질과 에콰도르 같은 중남미 상품 생산국들은 시장 스트레스를 더 잘 흡수
- IMF는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경제적 영향이 전 세계적이면서도 국가마다 불균등하게 나타난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충격을 관리하고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적절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설명
 - 동일한 충격이 어떤 국가에서는 교역조건 개선이라는 호재로, 다른 국가에서는 국제수지 악화로, 많은 경제권에서는 생활비 부담 증가라는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이유로 설명
 - 따라서 각국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 신중하게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외환 보유고가 제한적이고 재정 운용 여력이 부족한 국가는 특히 신중한 입장

Ⅲ. 현안분석

OECD 재정 건전성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72

- 이정욱 부연구위원

프랑스 재정위기론과 연금개혁 과정의 시사점 78

- 김명규 연구위원

독일 재정의 중기 지속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87

- 서영빈 부연구위원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재정대응의 시사점 95

- 김민경 부연구위원

2026년 독일 예산안 주요 내용 103

- 서영빈 부연구위원

현안분석은 당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OECD 재정 건전성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⁷⁴⁾

이 정 욱 부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1.16.

(1) 논의 배경 및 문제의식

■ OECD 국가 전반의 재정 여건 악화

-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인플레이션 등 연이은 충격으로 OECD 국가 재정은 **구조적 압박 국면**에 진입함
- 2024년 기준 OECD 평균 총부채 비율은 2007년 대비 약 40%p 상승했으며, 팬데믹 이후에도 **고부채 구조가 고착화**됨

■ 중장기 구조 요인으로 재정 제약 심화

- 인구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어 **성장에 기반한 부채 조정 여력이 제한**됨
- 연금·보건·돌봄 등 **의무지출 확대**와 함께 국방·기후·재난·안전 등 **신규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정부는 재정 건전화와 신규 지출 수요 대응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요구(dual pressure challenge)**에 직면하고 있음

74) 2025년 12월 OECD에서 Working Paper로 발표한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in OECD countries”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 핵심 문제의식

- 재정 건전성은 단기 적자 축소나 일률적 긴축이 아닌, **국가 기능과 지출 구조를 재설계(state redesign)**하는 중장기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 방식을 재설계할 필요**

(2) 주요 내용

■ 과거 재정 건전화의 교훈

- 성공적인 재정 건전화는 **외부 환경**(성장 여건, 정치적 지지 기반)과 **내부 제도 설계**(점진적 조정, 효율성 개선, 분배 영향 고려 등)에 크게 좌우됨
- 일률적·전면적 삭감 방식보다는 프로그램·정책 단위의 **전략적 지출 검토(spending reviews)**가 재정 건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재정 건전화 전략의 변화

- OECD 국가들은 단순 적자 축소를 넘어 **전략적 선택(strategic selectivity)** 접근을 채택함
 - 효율성 증대 및 지출 우선순위 조정(저성과 영역 구조조정)
 - 핵심 분야 확장(AI, 국방, 인프라 등 전략 분야 선택적 투자 확대)
- 재정 건전화를 정부 기능 재검토 및 정부 운영 방식 혁신 등 **국가 재설계**와 연계함

표 1 OECD 주요국의 재정 건전화 전략

국가	전략적 선택 접근	국가 재설계 관련 특징
호주	우선순위 프로그램(보건, 국방, 인프라 등)은 보호하며 지출 통제 및 재할당	지출 재할당 및 효율성 향상에 중점
캐나다	부처 및 기관의 재량지출 삭감 및 사회보호 및 국방에 재할당	정부 지출 재조정(Refocus government spending)을 통한 우선순위 지정
스위스	모든 연방 지출에 대한 포트폴리오 검토를 통해 구조적 절감 및 재할당(GDP의 0.6~0.7% 규모)	재정 건전화를 정부 기능 및 책임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 국가 재설계 방향으로 나아감
독일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연방부처의 지출을 절감하고, 우선순위 분야(사회적 결속, 인프라, 국방 등)에 재할당	재정 준칙 준수를 위해 지출 상충관계 검토 및 우선순위 재조정
영국	기능적 효율성(Functional efficiency)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의 전략적 재할당 및 효율성 증대	'국가 재편(Rewiring the state)'을 목표로 하는 격년 단위 지출 검토 및 정부 운영 방식의 혁신 추구

참고: OECD(2025)를 정리하여 작성.

- 급격한 재정 긴축보다는 경기·정치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조정이 주류를 이룸

표 2 OECD 주요국의 재정 건전화 속도 조절(2021~2024)

국가	접근 방식	주요 특징
호주	2단계 재정 건전화 전략	단기 지원 → 중기 예산 재정비(budget repair). 연간 지출 증가율 상한선 설정(0.6%). 지출 통제 및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한 건전화. 주요 프로그램 보호(보건, 국방, 인프라).
캐나다	데이터 기반 재정적 안전장치(fiscal guardrails)	노동시장 지표와 연동하여 조정.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때만 건전화 시작. 현재는 다른 정책 선호도 및 지출 압력과 균형을 맞춘 점진적 건전화.
스위스	부채 제동장치(debt brake) 상황 연장	상환 기간을 6년에서 12년으로 연장. 부채 감축 약속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조정 허용. 2027 구제 패키지(Relief Package 27)에 따라 2027~2029년 기간 동안 예산 지출에 대해 부채 제동장치 준수.
독일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전화	부채 제동장치(2025년부터 연간 50억 유로)를 준수하면서 사회, 인프라, 국방 지출 압력에 대응. 점진적 접근으로 필수 지출 수요를 충족.
영국	재정 목표 기반의 점진적 접근	2021년 가을 예산안에서는 GDP 대비 공공부문 순부채 비율을 3년 차까지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 행정부에 따라 목표 변경(3년 차에서 5년 차로 변경).

참고: OECD(2025)

■ 재정 제도의 혁신 및 강화 방향

- 재정 준칙은 위기 시 경직성 문제가 부각되며 유연성 확보가 과제로 제시됨
-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는 재정 격차(fiscal gap) 진단에는 유용하나 정책 간 상충관계 또는 정책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trade-off)도 제시할 필요
- 지출 검토는 정부 기능·정책 포트폴리오 재평가 수단으로 중요성이 확대됨
- 독립 재정 기관의 재정 감시·평가 기능을 강화할 필요

표 3 OECD 주요국의 재정 제도 적용 사례

국가	재정준칙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지출 검토	독립 재정 기관
호주	공정예산헌장(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수치적 제약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투명한 보고를 통해 신뢰성 확보.	예산 추계 프레임워크(Forward Estimates Framework). 투명한 기준선이자 소통 도구로서 재정 건전화의 순서를 명확히 제시.	-	호주 의회예산처(PBO)는 정부의 재정 건전화 조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구조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강조.
캐나다	재량적으로 목표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비구속적 재정 기준선(fiscal anchor)으로 유연성 확보.	예산 문서에 이전 기준선과의 차이를 설명하여 투명성 확보.	전략적 정책 검토(Strategic Policy Review) 및 포괄적 지출 검토(Comprehensive Expenditure Review) 시행. 주로 운영상의 변화를 통해 지출 절감.	캐나다 의회예산처(PBO)는 발표된 재할당과 실제 이행 간의 격차를 지적하며 정부 활동을 감시.
스위스	헌법에 명시된 구속력 있는 부채 제동장치(debt brake). 상환기간 연장으로 경직성 완화.	4개년 통합업무 및 재정계획(Integrated Task and Financial Plan). 중기 예산 전망 내에서 규칙 위반을 예측하고 조기에 경고하는 역할.	업무 및 보조금 검토(Review of tasks and subsidies). 연방정부 기능을 재평가하는 포괄적인 포트폴리오 검토.	-
독일	헌법에 명시된 구속력 있는 부채 제동장치. 예산 외 기금(extrabudgetary funds)로 경직성 완화.	중기재정계획. 부채 제동장치 준수를 위해 정책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 제시.	팬데믹 이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예산 과정에 검토를 포함하고 투명성을 높임.	-
영국	행정부 교체에 따라 재정 목표가 변경되며, 유연성 높음.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지출 검토를 병행하여 기회비용 제시.	2년마다 지출 검토를 실시하고 '국가 재편(Rewiring the state)' 비전에 따라 신기술 활용 및 효율성 강조.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평가하고 비판적 역할을 수행.

참고: OECD(2025)를 정리하여 작성.

□ 소통 전략

- 재정 건전화를 ‘긴축’이 아닌 ‘전략적 재할당(strategic reallocation)’으로 설명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는 추세임

(3) 정책적 시사점

□ 국가 재설계 관점의 재정운용 전환 필요

- 우리나라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중장기 재정 제약이 심화될 전망이다
- **지출의 구성과 관리 방식을 혁신하는 국가 재설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성장 촉진을 위한 핵심 투자(R&D, AI 등)는 보호하되, 비효율적이거나 경직적인 지출 영역에서 재원을 확보

□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한 선순환 구축

- 단순 지출 억제보다 **성과를 기준으로 한 재정운용 체계 정착**
- 저성과·중복·관행적 재량지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인구·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 및 지출 누수 최소화**
- 확보 재원은 AI 대전환, 신산업 혁신, 재난·안전, 민생 안정 등 중장기 성장·체감도 높은 분야에 **선택·집중 투자**
-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조정에 실질적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재정 혁신의 실효성을 제고
- 성과 중심 투자는 단기 경기 회복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간 **선순환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Top-Down 예산제도의 실질화와 책임성 강화

- 전략적 지출 재배분을 위해 Top-Down 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함
- 부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지출 한도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방향 설정 기능을 보완할 필요

(4) 종합 판단

■ OECD 논의는 재정 건전성을 단순한 긴축이 아닌 우선순위·성과·제도의 문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시사함

■ 우리나라 재정운용도 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전략적 자원 배분,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결합한 재정 혁신을 통해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출 우선순위 판단 기준 및 자원 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정과제인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등의 국정과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성장 중심 재정운용임을 강조

프랑스 재정위기론과 연금개혁 과정의 시사점

김 명 규 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2.23.

(1) 검토 배경

■ 2025년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재정위기론 대두

- 프랑스의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1% 이하)과 재정수지 악화, 공공부채 확대 등 부정적 경제·재정상황 인식 증가
- 2025년 Fitch, S&P, Moody's, DBRS 등 대부분 신용평가사가 프랑스 신용등급을 일제 하향 조정하면서 재정위기론 확산

■ 2026년 프랑스는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연금개혁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분석 필요

-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연금개혁안(2023년 적용)을 정치적 카드로 다시 사용하였고, 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 회복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
 - 신용평가사의 등급하락 배경에는 재정지표 악화와 정치적 교착으로 인한 재정 긴축 불능 상황이 반영
- 2025년 3월 통과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 이후 후속 과제에 대한 시사점 검토 필요

(2) 프랑스 재정현황

■ 경제·재정지표 변화 : 저성장+높은 적자+국채금리/스프레드 상승

- 프랑스의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
 - 2025~2026년 프랑스 성장률은 기관별로 대체로 0.6~0.9%대의 “저성장” 범위로 전망(EC는 2025년 0.7%, 2026년 0.9%로 전망)
 - 정치 불확실성과 재정조정 부담이 내수 성장을 억제
- 재정수지 적자 지속, 공공부채의 확대 전망
 - 2024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5.8% 적자에서 2025년 적자를 5%대 중반으로 낮추려는 경로로 언급
 - EC는 공공부채 비율이 2027년 GDP의 120% 정도로 상승 가능성 제시 (2025년 2분기말 기준 115.6%)

표 1 프랑스 경제 및 재정 전망 : EC 발표(2025.11.)

구분	2025	2026	2027
경제성장률 (% , YoY)	0.7	0.9	1.1
물가상승률 (% , YoY)	1.0	1.3	1.8
실업률 (%)	7.6	8.0	8.2
일반정부 재정수지 (% of GDP)	-5.5	-4.9	-5.3
총 공공부채 (% of GDP)	116.3	118.1	120.0
경상수지 (% of GDP)	-0.0	0.6	0.6

자료: EC, Economic Forecast for France, 2025.11.17.

- 국채금리 상승, 국채 스프레드 확대(변동성 증가)
 - 2025년 9월 전후 정치 혼란 속에서 프랑스 10년물(OAT) 금리가 3.47% 수준으로 언급되며, 독일 국채(Bund) 대비 스프레드 확대⁷⁵⁾

75) <https://www.tradeweb.com/newsroom/media-center/insights/blog/tradeweb-government-bond-update--september-2025/>

그림 1 프랑스 10년물 정부채 수익률 추이 : 최근 1년



자료: Trading Economics 홈페이지, 2026.2.5. 접속, 저자 일부 수정.

(3) 재정위기론의 실제

■ 2025년 프랑스 재정위기는 지속가능한 재정에 대한 정치적 '집행능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출발

- 출발점(2024 실적) : 2024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5.8%, 공공부채는 GDP 대비 약 113% 수준으로(2024년 말 기준) 재정준칙 기준*과 큰 차이⁷⁶⁾

* EC SGP 협약 기준으로 일반정부 재정적자 3%, 부채 60% 이내에서 관리

- 정부는 2025년 재정적자를 대략 5%대 중반으로 낮추겠다는 경로를 제시했지만, 미달성 예상
 - 성장이 악화(내수 둔화)되고, 재정긴축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
 - 유럽위원회(EC)도 2025년 성장률 0.7%로 낮고, 재정적자 5.5%, 부채비율 상승(2027년 120% 근접) 전망⁷⁷⁾

76) <https://www.euronews.com/business/2025/03/27/french-deficit-came-in-lower-than-expected-in-2024-but-risks-remain>

77)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surveillance-eu-member-states/country-pages/france/economic-forecast-france_en

- 2025년 위기의 촉발 : 2024년 총선 이후, 의회 분열 상황이 2025년에도 지속되며, 예산안(재정긴축안) 처리의 불확실성 확대
 - 앞으로 2024년 수립한 ‘중기 재정 구조 계획’⁷⁸⁾대로 긴축*을 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회의적 시각
 - * 적자감축 목표(2024년 6.1% → 2025년 5.4% → 2029년 → 3% 미만)
 - 부채관리 목표(2024년 114~116% 수준에서 2031년까지 매년 평균 1%p 감축)
 - 지출 억제 목표(2025~2029년 연평균 순지출 증가율을 1.1% 이내로 제한)⁷⁹⁾

■ 프랑스 국가신용평가 등급 하락

- 강등의 논리는 재정지표 악화와 정치적 교착으로 인한 재정긴축 불능
- Fitch는 신용등급을 AA- → A+로 강등(2025.9.12.)
 - 강등 이유로는 정치적 불안정과 재정수지 개선(긴축) 추진 능력이 약화, 부채비율이 2027년까지 더 상승할 가능성 지적⁸⁰⁾
- S&P도 AA- → A+로 강등(2025.10.17.), 안정적 전망
 - 정치적 불안정이 재정 긴전화(fiscal consolidation)를 훼손한다는 점을 부각
- DBRS도 AA(high) → AA로 한 단계 강등(2025.9.19.), 안정적 전망
 - 프랑스 정부의 재정 긴전화 경로가 중기 재정 구조 계획의 예상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평가

78)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MTFSP)은 2024년 4월 EU의 새로운 재정준칙에 따른 부채와 재정적자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

79) EC(2025), Assessment of The French Medium-Term Plan in Light of the Additional Information Provided by France on 16 January 2025,

80) <https://www.euronews.com/business/2025/09/13/fitch-downgrades-frances-credit-rating-amid-political-crisis>

표 2 주요 신용평가사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발표

신용평가사	발표일	등급	전망
Fitch	2025.9.12.	A+	안정적
	2025.3.14.	AA-	부정적
	2024.10.11.	AA-	부정적
	2024.4.12.	AA-	안정적
S&P	2025.10.17.	A+	안정적
	2025.2.28	AA-	부정적
	2024.11.30.	AA-	안정적
Moody's	2025.10.24.	Aa3	부정적
	2024.12.14.	Aa3	안정적
	2024.10.25	Aa2	부정적
DBRS	2025.9.19.	AA	안정적
	2025.3.21.	AA (high)	부정적

자료: Trading Economics 홈페이지, 2026.2.5. 접속

(4) 프랑스 연금개혁안의 협의 중단

■ 왜 재정위기와 연금개혁안이 함께 움직였나?

- 연금은 프랑스에서 재정지출의 큰 축이라 볼 수 있고, 재정 지속가능성 회복 패키지의 핵심
 - 2025년에는 의회 구성에서 과반을 만들기 위해, 연금개혁안(2023년 9월 시행)을 정치적 교환 조건(유예·완화)으로 사용
- 이러한 조치는 신용평가사와 시장으로 하여금 재정긴축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하는 계기로 작용(등급 강등 논리)⁸¹⁾

■ 재정 신뢰 회복을 위한 연금개혁안이 오히려 정치적 거래비용으로 작용

- 프랑스는 2023년부터 연금개혁안(정년 62 → 64세 상향)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2025년 정치 교착 속에서 이 이슈가 예산협상 카드로 부상

81) <https://www.euronews.com/business/2025/09/13/fitch-downgrades-frances-credit-rating-amid-political-crisis>

● 하원에서 연금개혁안 조치를 중단·유예하는 방향의 표결이 통과(2025.11.12.)⁸²⁾

- 중단 시점까지 진행중이던 조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채로 유지

* 법정은퇴 연령은 62년 9개월로 늘어난 상태이며, 완전 연금 기여 기간도 6개월 늘었고, 최소연금액은 개혁안을 유지, 특수연금 통·폐합 논의 중단 등

● 핵심 사회보장(의료·복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연금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 (2028.1.1.까지 유예)로 미루는 합의가 이루어짐(2025.12.9.)⁸³⁾

표 3 프랑스 연금개혁안 비교

구분	기존 (~2023.9.)	개혁안 (2023.9.~)	조치중단 이후 (2025.11.~)	개혁안 특징
법정 은퇴 연령	62세	64세 (2030년까지 단계적 상향)	62세 9개월	매년 3개월씩 연장 예정
완전 연금 기여 기간	42년	43년 (2027년부터 적용)	42.5년(170분기)	보험료 납부기간 1년 연장
최소 연금액(월)	약 961유로	최저임금의 85% (약 1,200유로)	개혁안 유지 (기존 인상분+물가 연동분)	신규 은퇴자 대상 하한선 인상
특수연금	직종별 연금제도 운영	일반 제도로 통·폐합	통·폐합 논의 중단	공공부문의 특혜 폐지 추진
조기 은퇴 규정	특정 조건하에 가능	고위험·육체 업무 종사자(경찰, 소방관, 간호사 등) 혜택 유지	특수직 3개월 단축	일부 예외 인정

자료: 저자 작성

■ 2026년 예산안은 법정 기한(2025년말)을 넘겨 통과(2026.2.2.), 예산 의결 시까지는 임시예산으로 집행

● 프랑스 의회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적 대립이 극심한 상태

- ①어느 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②연속된 내각 붕괴, ③긴축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발 등으로 정치적 합의 도달 난항

82) <https://www.euronews.com/2025/11/12/frances-national-assembly-overwhelmingly-votes-to-suspend-controversial-pension-reform>

83) <https://apnews.com/article/france-pension-reform-suspended-health-care-budget-63eed2ffe11ecd9103f3954d8befd6b8>

- 프랑스 헌법 47조 4항에 근거해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이 공포되지 않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예산 조치로 특별법(La loi spéciale 2026) 제정 (12.20. 공포)
 -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기존 법령에 근거한 세금 징수 가능
 -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필수 경비* 지출 가능
- * 공무원 급여, 사회보장비용, 국방 및 치안 유지비 등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계속 사업' 비용

■ 2026년 예산 총량⁸⁴⁾

- 조세부담률은 2025년 대비 0.3%p 상승한 43.9%
 - 2025년 한시 도입했던 대기업(약 400개사) 대상 법인세의 부가세를 한 해 더 연장해 73억 유로 추가 세수 확보
 -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로 약 2억 유로 추가 세수 확보
 - 소득세율 구간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될 예정
- 공공 지출은 국방비 증가, 부채의 이자지출, 민생예산 증가로 GDP 대비 56.6% 규모로 편성
 - 재정준칙 준수를 위해 실질지출 증가율은 0.9% 수준으로 제한
 - 국방비는 『2024-2030 국방기획법』에 따라 33억 유로 순증
 - 국가부채 이자는 금리 변동에 따라 약 593억 유로 규모
-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0%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당초 예산안에 담긴 4.7%보다는 0.3%p 많은 수준
- 공공부채 비율은 118.2%로 채무 상환 비용 상승으로 인해 2025년 115.9% 대비 부채 비율 증가
-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장률은 1.0%로 전망(프랑스 정부 가정)

84) 프랑스 관보(<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53508155>)와 <https://www.reuters.com/business/what-is-frances-2026-budget-2026-02-02/>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표 4 2026년 프랑스 예산 총량 변화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5년	2026년	전년대비 증감
조세부담률	43.6	43.9	0.3%p
재정지출(세액공제 제외)	56.8	56.6	-0.2%p
재정 수지	-5.4%	-5.0%	0.4%p
국가 채무	115.9%	118.2%	2.3%p
경제 성장률(전망)	0.7~0.8%	1.0%	-

주: 중앙정부, 지방 공공행정기관, 사회보장국을 포함한 모든 공공행정기관 합산 기준

자료: 프랑스 관보(<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53508155>)와 <https://www.reuters.com/business/what-is-frances-2026-budget-2026-02-02/> 등의 기사를 통해 저자 정리.

(5) 시사점

■ 정치적 불안은 곧 금융비용으로 작용하고, 신용등급에도 영향

- 재정 연금개혁안이 예산안 협상의 카드로 사용되며, 기존 긴축 경로(계획)의 신뢰가 흔들렸고, 그 결과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스프레드 확대로 연결

■ 프랑스 연금개혁안 사례를 참고해 향후 한국의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 필요

- 한국은 2025년 3월 입법으로 모수개혁을 확정했고 2026.1.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2033년에 13% 도달(기존 9%에서 점진 인상)
 - 소득대체율(목표치)를 2025년 41.5%에서 2026년 43.0%로 상향
 - 기존에는 2028년까지 40%로 하락 예정이었음
 - 출산·군복무 크레딧(가입 기간 인정)* 확대

*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

둘째 아이부터 인정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혜택 확대

- 연금 지급 보장을 국가 책무로 법에 명시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향후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 구조 개혁 논의 지속 필요
 - *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 및 경제 상황에 맞춰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기금 고갈을 늦추는 구조적 장치
 - **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성세대의 희생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

■ 국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안이 중요

-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급여·부담의 균형)를 하지 못하면 개혁이 되레 위협 요인으로 작용
 - 개혁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 신뢰를 깎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신용평가사가 보는 것은 ‘법안 존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집행 가능성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

독일 재정의 중기 지속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서영빈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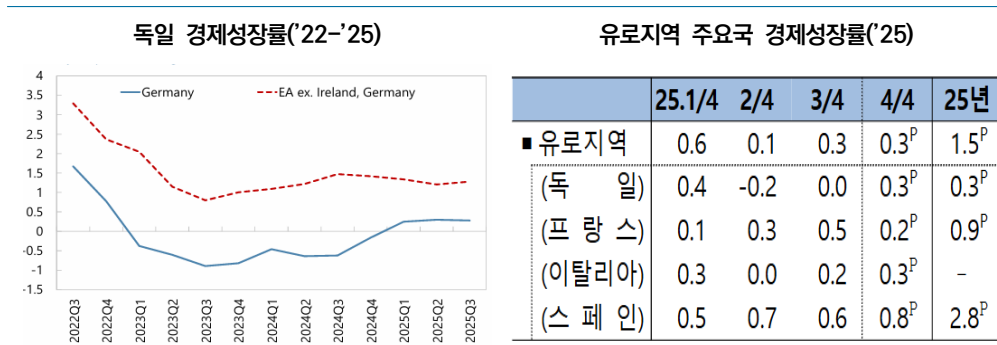
작성시점 : 2026.3.16.

(1) 경제 현황 및 정책

■ 독일 경제는 성장 부진이 장기화된 가운데 '25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회복세를 뒷받침하고자 하나, 반등 폭은 제한

- '23-'2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 회복 지연
 - 에너지 가격 충격, 통화긴축, 글로벌 교역 둔화가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
- * 독일 경제성장률(%) : ('23년) -0.3 ('24년) -0.2

그림 1 독일 및 유로지역 주요국 경제성장률



자료: IMF(2026)

자료: 한국은행(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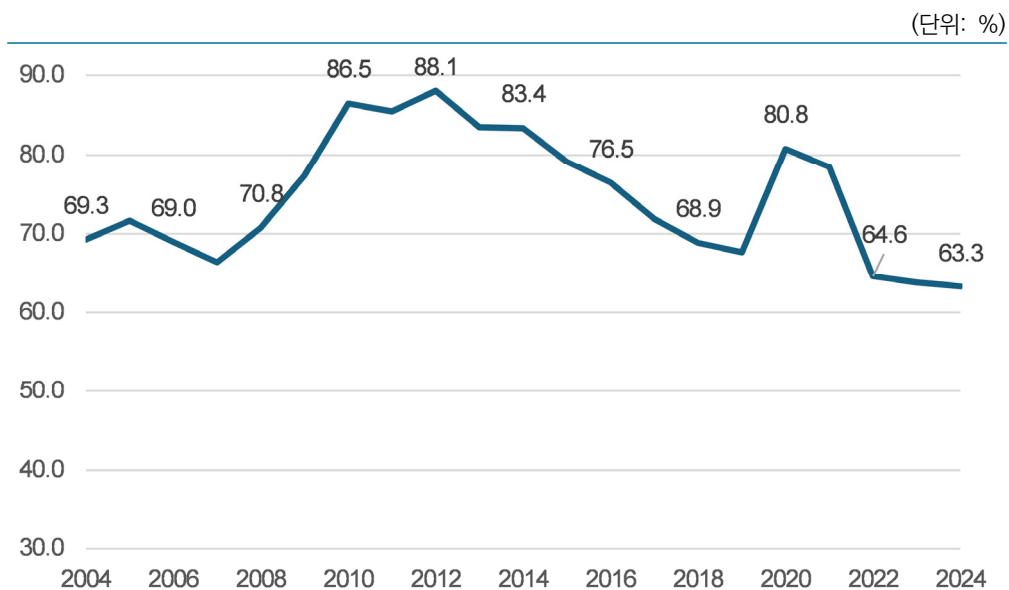
- '25년 국방비 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 하였으나, 회복 수준은 기대보다 낮은 수준
 - 재정확대 정책 발표 이후 단기 경기 회복 기대가 형성되었으나, 대외 수요 둔화와 구조적 생산성 제약 등으로 반등 폭은 제한적

- 정부는 '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3%에서 1.0%로 하향 조정
 -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과 정책 효과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타난 데에 따른 판단⁸⁵⁾
 - * Deutschebank는 재정부양 정책이 '26년 실질 GDP의 약 +1.0%p 기여 전망
 - * Bundesbank는 '26~'28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6%, 1.3%, 1.1%로 전망

▣ 독일의 일반 정부부채 비율은 위기 시 상승하고 회복기에는 조정되는 패턴으로, 최근에는 60%대 초반 수준을 유지

- 금융위기 이후 '10년 88.5%까지 상승하였으나, '19년 68.9%로 상당폭 하락하며 재정건전화 기조가 작동
- 이후 팬데믹으로 '20년 80.8%까지 재상승하였으나, '24년에는 63.3%로 다시 낮아지며 위기 이전 수준으로 근접

그림 2 독일 일반 정부부채 비율 추이('04-'24)



자료: OECD(2025)

85)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government-cuts-2026-2027-growth-forecasts-due-rising-uncertainty-2026-01-28/473894>

- 다만, 독일중앙은행은 중·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⁸⁶⁾
 - 현행 재정기조가 유지될 경우, '40년경 부채비율이 90%에 근접하거나 100%를 상회할 가능성
 - '30년 이후 재정적자를 GDP 대비 1% 미만으로 낮추지 않을 경우 재정 여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

(2) 국제기구 평가

■ 최근 IMF⁸⁷⁾와 유럽위원회(EC)⁸⁸⁾는 독일 재정의 중기 부채 경로 관리 중요성과 장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시

- 독일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등 구조적 요인으로 중기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
- 중기 부채 경로 관리와 함께 장기에는 구조 개혁을 병행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필요

■ IMF는 독일 재정정책이 단기 경기 대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중기 부채경로 관리와 장기의 구조적인 부담 대응의 병행이 필요함을 강조 ('26. 2.)

-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을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공공투자 확대정책은 잠재성장률을 연간 약 0.2%p를 제고하는 효과
 - * 실질 GDP 성장률 : **0.2%(2025) → 1.1%(2026) → 1.5%(2027)로 전망
 - * 산출갭 -1.2%(2025) → 0.1%(2027)로 축소 예상
- 중·장기에는 성장 지원과 함께 부채 지속가능성 확보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함을 강조

86)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germany-headed-biggest-deficit-since-reunification-bundes-bank-says-2025-12-19>

87)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6/02/12/germany-2025-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statement-by-the-573858>

88)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debt-sustainability-monitor-2025_en

- 재정정책은 “중기적 부채 지속가능성 확보(ensure debt sustainability over the medium term)”를 지향
-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장기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병행함으로써 안정적인 부채비율을 유지
 - * '25~'30년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0.7% 감소하면서 중기 잠재성장률이 약 0.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 '27~'35년 주요 재정지출 증가 요인 : 고령화 관련(연금·의료) GDP 대비 +2.2%p, 국방 지출 : +0.5%p, 이자지출 : +0.4%p
- 구체적으로 노동공급 확대, 절감가능 재원 마련, 규제 및 행정부담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등을 권고
 - 노동공급 확대를 위해 보육지원 강화, 2차 소득자 및 저소득자의 한계세율 완화,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 추진을 제시
 - 지출검토를 통해 절감 가능 재원을 발굴하고,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축소 및 연금개혁 등을 병행할 필요성
 -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규제·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혁신기업의 성장 여건 개선을 권고

■ EC는 독일의 단기 재정 위험이 크지 않으나, 현재의 정책 경로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중기에는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해당함을 제시 ('26. 2.)

- 독일의 단기 재정위험은 크지 않으며, 단기 유동성·차환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 해당
 - '26~27년 자금조달필요액(Gross Financing Needs, GFN)은 GDP 대비 약 15.5% 수준으로 전망
 - * 자금조달필요액 : 당해 연도 재정적자, 만기도래 채권(원금), 이자비용 등을 합친 총액
 - 주요 신용평가사 기준, 국채 신용등급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국채 위험 인식도 매우 우호적
 - * 무디스는 독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망은 안정적

- 그러나 중기에는 부채 상승 경로에 따라 재정 지속가능성 위험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
 - 현재 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정부부채 비율은 '25년 63.5%에서 '36년 9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중기에는 high risk로 분류
 - '26년 이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적자(GDP의 2.1%)를 전제로 하여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가 부채 상승의 주된 요인
 - *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의 자동적인 증감을 제외하고 시산되는 재정수지
 - 인플레이션과 성장에 따른 부채의 순누적증가 효과가 일부 완충 역할을 하나, 그 효과는 점차 축소되는 구조로 확인
 - * 이자율-성장을 차이에 따른 부채 순누적(자동증가) 효과
- 장기에는 고령화 비용과 초기 재정 여건이 구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
 - S1 지표 기준, '70년까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60%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중기 조정 규모는 3.5%p로 추정
 - * S1 지표 : 목표 국가 부채비율 내 관리를 위해 매년 조정되어야 하는 기초재정수지 수준을 의미
 - * S1 지표 중 2.3%p는 초기 재정적자 구조, 1.1%p는 고령화 비용 증가에 기인
 - S2 지표 기준, 장기 부채 안정을 위해 GDP 대비 4.1%p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할 필요
 - * S2 지표 : 국가부채 청산을 위해 필요한 기초재정수지 개선 수준을 의미
 - * S2 지표 중 2.7%p는 불리한 초기 재정여건, 1.4%p는 고령화 비용 증가에 기인
- 독일의 거시·재정 가정 변화에 따른 부채경로 민감도는 높게 나타나며, 추가적인 위험 확대와 완화 요인이 동시에 존재
 - 성장률, 금리, 재정수지 등 거시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부채 경로가 민감하게 반응
 - 추가 위험 확대 요인으로서는 재정준칙 개정과 인프라·기후중립 특별기금에 따른 추가 차입 가능성 등을 제시

- 추가 위험 완화 요인에는 국채 만기 장기화, 안정적·분산된 투자자 기반, 낮은 외화표시 부채 비중, 양(+)의 순대외투자지위(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NIIP) 등을 제시

(3) 정책 시사점

■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재정 운용과 중기 재정 경로를 함께 고려할 필요

- 확장적 재정 정책은 경제에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존재할 경우, 경기 회복 효과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 재정지출의 구성·집행 속도·승수 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고, 성장 잠재력 제고와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구조를 재편할 필요
- 우리나라도 경기 대응 과정에서 중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중심으로 재정 확대 정책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국가부채 경로 등을 고려할 필요
 - 지출구조조정, 성과연계 재정관리 등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 기여

■ 고금리·저성장 환경하에서는 보다 신중한 재정정책 운용이 필요하며 장기에는 고령화 대응, 탄소 전환 비용 등 구조적 개혁이 병행될 필요

- 성장세는 둔화되고 금리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는 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필요
- 장기 재정 부담은 초기 재정 여건과 고령화 지출 등 구조적 원인에서 주로 기인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출 효율화 및 구조적 개혁을 병행
- 독일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역시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구조적 위험 요인에 대응을 강화할 필요

- 경기부양, 산업의 구조전환 등의 직·간접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에 따른 신중한 재정 운용 지향
- 고령화 대응 지출 증가, 탄소 전환 비용,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강화

참 고

IMF, Article IV Consultation

■ 회원국의 거시경제 및 재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연례 협의 보고서

- (목 적) 회원국의 거시경제 및 재정·금융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권고를 제시
- (내 용) 최근 경제 여건과 성장 전망을 평가하고 재정·통화·금융정책의 적정성을 진단하며, 중기 위험 요인과 구조적 과제를 점검한 후 거시경제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시
- (구 성) 배경, 최근동향, 전망 및 위험요인, 정책논의, 평가 및 정책 권고

■ '26.2월, 독일의 경제전망, 재정정책 방향, 부채 지속가능성 및 구조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 발표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 EU 회원국의 부채 지속가능성을 단기·중기·장기 시계에서 평가하는 재정위험 분석 보고서

- (목 적) 회원국의 공공부채 및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등급을 제시
- (내 용) 정부부채 비율과 재정수지 전망을 기초로 단기 자금조달 위험, 중기 부채경로, 장기 재정압력 요인을 분석하고, 확률적 시나리오 및 보완지표를 통해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제시
- (구 성) 단기 위험 분석, 중기 부채전망, 장기 지속가능성 지표, 추가 위험요인 분석, 국가별 현황 및 전망

■ '26.2월, 2025년 거시·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EU 및 국가별 재정 위험을 평가한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5 보고서 발표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재정대응의 시사점

- 주요 경제 지표 변동을 중심으로

김 민 경 부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3.16.

(1) 분석배경 및 대상

■ 미-이란 전쟁 발발로 국제 에너지 시장과 거시경제에 전 세계적 복합 충격 발생

- 유가가 단기간에 \$120 수준까지 급등하고 아시아 LNG 스팟(현물) 가격도 \$25/MMBtu 수준으로 급등하는 등 단일 분쟁으로 역대 최대 에너지 공급교란 발생
 - 과거 유사 사례와는 달리 에너지 공급충격과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해협의 봉쇄로 해상운송리스크와 같은 공급망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공급충격

■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자 물가(PPI)를 자극하고 이후 소비자물가(CPI)로 전가되는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경로로 작동

- 일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상승이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반영되는데 1~3개월의 시차를 보이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는 3~6개월의 시차로 나타남
- 한국은 에너지 원료 수입의존도가 90% 이상 수준으로 환율 및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의 국내 전가율이 높은 구조

■ 환율 및 에너지가격 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및 공기업 경영 부담이라는 세출 증가로 재정에 영향

- 세입측면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내수소비 둔화 및 부가가치세 감소로 재정에 영향

- 세출측면에서는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금 확대, 공공요금 동결로 인한 공기업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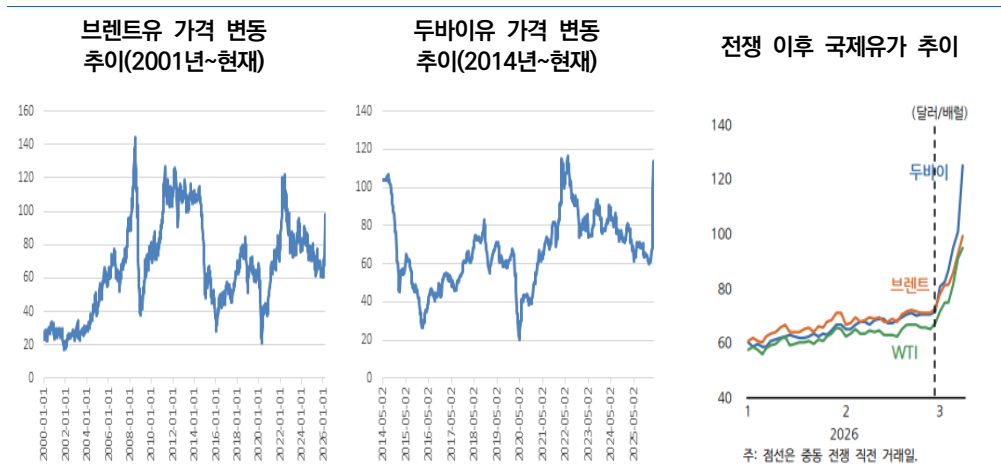
■ 분석대상 지표는 국제 분쟁 시 에너지·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 천연가스, 달러인덱스, 물가로 선정

지표	분류	물가대비 시차	의미
국제유가	선행	2~4개월 선행	분쟁발생-공급차단-즉각경제충격
천연가스	선행	2~4개월 선행	
달러인덱스	선행	1~3개월 선행	안전자산-수입물가급등
생산자물가	동행	기준	에너지가격-수입물가-소비자물가 전가 및 파급
소비자물가	후행	기준	

(2) 주요 지표 추이

■ 유가

그림 1 브렌트유, 두바이유 가격 변동 추이



자료: 블룸버그, KDI

- 브렌트유와 두바이유의 동반 급등은 2000년 이후 네 번째* 국면이나 공급 차단의 물리적 지속성에서 차이가 존재

- 이전의 아랍 내전, 러-우전쟁 상황에서는 단기 공급 불안 후 수 주 이내에 완화되거나 수요가 조정되었으나 현재는 해협봉쇄가 지속되어 공급의 강제 병목현상이 중첩된 상황

* ('2008년 6월) 글로벌수요견인형 \$147, ('2011년~2014년) 아랍의 봄 \$100~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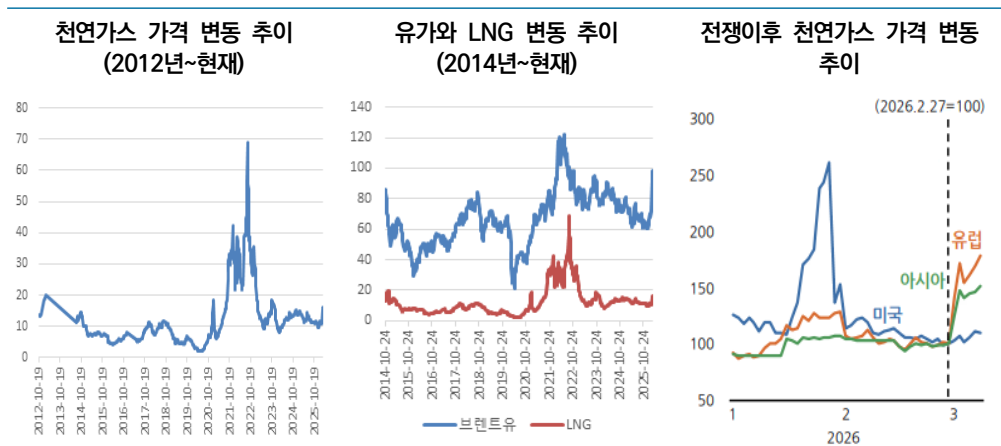
* ('2022년~2023년) 러-우 전쟁 \$128, ('2026년 3월~현재) 미-이란 전쟁 \$120

	원인	공급충격	충격해소	LNG 동반충격	지속기간
2008년	중국·인도 급성장에 따른 글로벌 수요견인	없음	대체공급처인 미국 석유와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	없음	5개월
2011~2014	지정학불안	제한적	석유 증산	없음	4년
2022년	공급국제재	부분적(우회)	국제기구방출과 우회공급	유럽에 국한	12개월
2026년	해협물리적봉쇄	완전차단	-	동시급등	-

- 기존에는 수요조정과 우회경로 확보, 대체 공급으로 해소되었으나 전통적 시장의 수요공급 교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태 대응의 차별점

■ 천연가스

그림 2 천연가스 가격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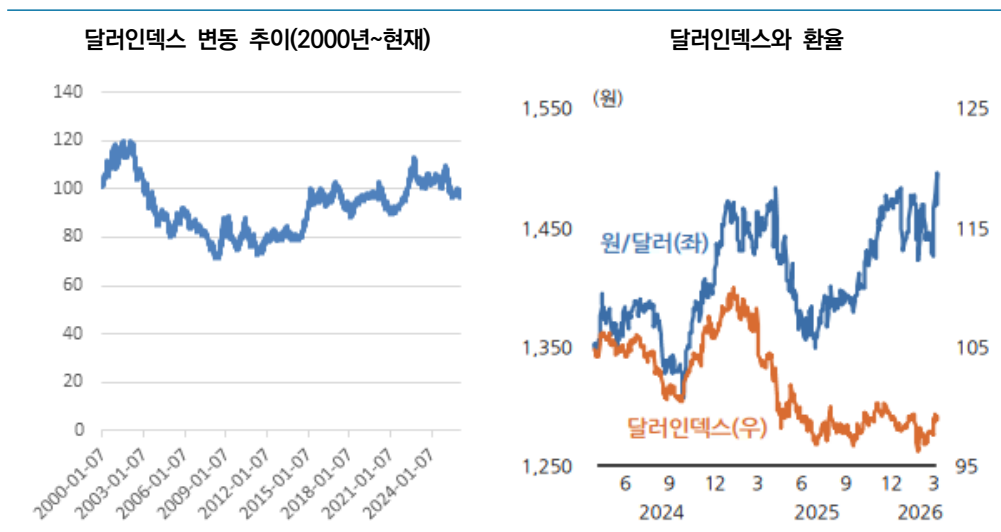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KDI*JKM(일본·한국 가격지표)

- 천연가스 시장은 장기계약과 현물시장이 혼재된 구조로 단기 공급 충격 발생 시, 가격 변동성이 유가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
 -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JKM)은 유럽 천연가스 수요와 해상 운송리스크 및 난방과 같은 계절적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IEA, 2023)
- 최근 가동 중단 및 해협봉쇄로 공급망이 마비된 카타르*는 국내 천연가스 수입량의 약 33%를 의존하고 있어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예상
 - 천연가스는 선물거래가 일반적이고 현 시점은 난방과 같은 계절수요가 감소한 시점이나 해협봉쇄가 장기화로 이어질 시 운송차질로 인한 상방압력 존재
 - * 세계최대 LNG 수출국이며 생산중단으로 글로벌 운송사들은 고객사에 계약상 의무에 대해 불가항력 선언(블룸버그통신, 2026.03.02)
- 러-우 전쟁 당시에도 LNG 수송관이 파괴되어 공급충격이 있어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수요의 대부분이 유럽선이라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의 공급은 안정적이었던 점이 이번 상황과 차이

달러인덱스

그림 3 달러인덱스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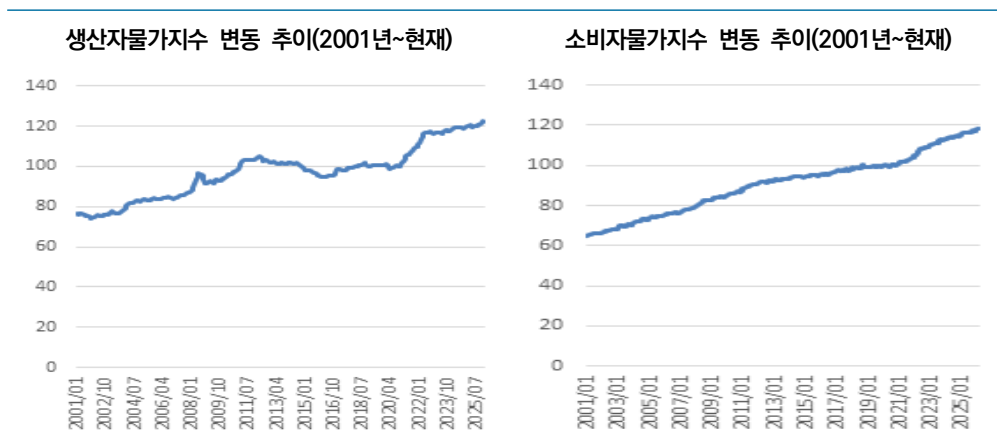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KDI

- 달러인덱스는 주요 교역통화 대비 달러가치의 변동을 의미하는 금융 지표로 국제적 금융시장 위험인식 정도와 원자재 가격, 환율 및 수입물가 변동을 설명하는 선행지표
 - 달러강세와 원화약세*의 선행 지표로 일반적으로 2-4주 시차를 두고 수입 물가에 반영되는 경향성 존재
 - * 원/달러 환율(월말) : ('26.1월) 1,439.5원 → (2월) 1,439.7원 → (3월 13일) 1,488.5원
 - 달러인덱스의 상승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전방위적 압박과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물가상승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
 - 물가상승 대응 과정에서 민생안정 재정지출 확대와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관련 공기업 적자 확대 등 재정부담 요인 발생 가능
- 달러인덱스는 지정학적 갈등이나 글로벌 금융 불안이 발생할 경우 안전자산 선호로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는데 이번 사태에도 달러강세가 확대되는 흐름
 -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국내 물가 및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및 환율상승이 물가 및 민생 부담으로 급격히 전가 되지 않도록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동향과 연계한 정책 대응 필요

□ 물가

그림 4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추이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모두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앞서 논의한 선행 지표들이 급등한 바, 시차를 두고 상방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생산자 물가지수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공급망 충격 발생 시 상승 확대로 나타났는데 가격변동과 환율변동에 민감한 지표로 기업 생산비용 변화에 선행적으로 반영
 -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생산비용 증가를 통해 기업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
 -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전가되기까지는 2~4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추경과 같은 재정지원 방안 필요
- 물가 상승 압력은 가계 실질 구매력 감소와 기업 비용 부담 증가를 통해 거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물가 안정 정책 및 재정지원 수요 증대
 -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율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 시점에서 물가안정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정책 조합으로 파급 영향 최소화

(3) 시사점

■ 미-이란 국제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은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정여건에 부담 요인

- 호르무즈 단일 해협에 세계 에너지 공급의 20%이상 집중된 지정학적 특성상 공급충격이 이전에 비해 파급효과가 큼
- 에너지 공급 불안과 해상 운송 차질로 인한 공급망 전반의 위기에 대비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이로 인한 거시경제의 변동성 관리 필요
 - 과거 국제 분쟁 사례에서도 유가상승은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거시경제에 파급되는 경향 존재

■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변동이 물가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대응을 강화할 필요

- 이미 장기적으로 지속 중인 러-우전쟁으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어 저성장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진 상황으로 재정당국의 대응 여력이 크지 않음
- 단기적으로는 비축유 방출이나 유류세 탄력 운용,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 등으로 대응 필요
- 에너지 가격 변동이 실물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상승의 파급 경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물가안정 정책과의 연계 대응 필요

■ 중장기적으로 지속 시, 외부 충격의 지속기간과 파급효과 범위 관리로 물가 대응 및 세입감소, 경기 둔화에 따른 확장재정지출에 대비 필요

- 최근 국제분쟁은 에너지 공급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과 같은 물류 체계에도 영향을 끼쳐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져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특성
- 세입 측면에서는 무역수지 악화와 생산자물가의 상승이 성장과 기업투자 및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민간소비 둔화로 이어져 세수 감소 예상
- 세출 측면에서는 에너지가격 및 물가 급등으로 인한 산업계와 민생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과 유류세 인하와 같은 조세지출 확대로 이어져 재정수지 악화 우려
 - 재정여력 및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해 팬데믹 시기의 보편적 지원 방식 보다는 에너지 의존적 산업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타당

참 고

■ 2001년 이후 발생 한 국제적으로 에너지와 경제에 영향을 미친 유사 선행사건

이벤트	발생시점 및 지속기간	에너지공급충격	유사도
9/11테러	2001.9/3개월	낮음(수요충격)	중(미-중등 갈등)
이라크 전쟁	2003.3/2개월	낮음(공급영향 제한적)	중(중동분쟁)
아랍의 봄·리비아내전	2011.1/1년	중간(공급영향 제한적)	중(정치불안)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1.3/1년	높음(LNG 영향)	높음(LNG 충격)
사우디 아람코 드론테러	2019.9/1주일	중간(단기 복구)	중(인프라 충격)
수에즈 운하 선박좌초	2021.3/6일	낮음(단기)	높음(해협봉쇄)
러-우 전쟁	2022.2/현재 진행중	높음(LNG 단절)	매우높음(사건유사)
예멘 반군 홍해 물류 점거	2023.11/현재 진행중	중간(대체 경로 존재)	높음(해협봉쇄)

2026년 독일 예산안 주요 내용

서 영 빈 부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3.25.

(1) 총량 및 주요 지표

■ 재정지출은 €5,245억으로 전년대비 €313억(6.3%) 증가, 세수입은 €4,264억으로 전년대비 €15억(-0.3%) 감소

- 재정 지출 증가분 €313억 중 대부분인 €287억은 재정준칙의 예외 대상인 국방비 지출 증가 등의 영향
- 재정수입의 감소는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1.0%로 조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14억 감소한 €3,872억 규모

* 독일 정부는 '26년 GDP 전망치를 '25.10월 1.3%에서 '26.1월-0.3%p 하향조정

■ 재정수지는 €981억 적자로 전년대비 €327억 적자폭 확대, 순차입은 €980억으로 전년대비 €311억 증가

-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3.9%, 정부부채비율은 64.8%

* '26년 지출 목표액 €6,311억 : 예산€5,245억, 기후기금 €230억, €인프라기금 €581억, 국방기금 €255억

표 '26년도 독일 예산안

(€억, %)

구분	2025 예산	2025 결산(잠정)(A)	2026 예산(B)	전년대비	
				증감 (B)-(A)	증감율(%) (B)-(A)/(A)
□ 재정지출	5,025	4,933	5,245	+313	+6.3
□ 재정수입	4,206	4,279	4,264	-15	-0.3
○ 세수입	3,868	3,886	3,872	-14	-0.3
○ 기타수입	338	393	392	-1	-0.4
□ 재정수지	-819	- 654	- 981	-327	-
○ 순차입	818	669	980	+311	-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2) 지출 주요 내용 (분야별)

□ 대내외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및 안보 예산의 대규모 확대 편성

- 국가 재정 준칙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국방 및 안보 분야에 '25년 결산 대비 €232억 증가한 €827억으로 편성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편성된 특별기금(€255억) 등을 포함하면 국방·안보 총지출은 €1,080억 규모에 해당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지출 확대

- 연방 예산 내 투자 지출은 €584억 규모, 단순 금융 거래를 제외한 투자 지출은 €479억 수준으로 편성
 - * 예산과 특별 기금을 합하면 총 €1,287억 규모의 투자 예상
-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라 연방 예산에서 €162억을 투입하여 전기 소비자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전환 지원 지속
- '디지털 협약 2.0'을 통한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 (최대 €25억) 등 민생 투자 지속

■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제도 개편을 통한 제도 효율화

- 노동사회부 예산은 연방 예산의 약 37.6%인 €1,970억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사회보장기금 항목은 전년 대비 €105억 증가한 €1,588억 규모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부모 수당 예산은 €75억에 해당
- 시민 소득 제도를 구직자 대상 기본 소득 지원 체계로 개편하면서 전년 대비 €10억 감액한 €281억을 편성하여 복지체계 효율성 제고

(3) 수입 주요 내용

■ 기업투자 활성화 등 조세 정책 변화로 인한 세수감소분의 예산 반영

-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가계 구매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 €48억을 예산안에 사전 반영하여 정책 연속성 확보

■ 노동시장 참여 제고 및 가계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은퇴 연령 이후에도 계속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월 최대€2,000 까지 비과세하는 ‘활동연금제’ 시행
 - * 정부는 이미 근로중인 약 28만 5천명의 은퇴자가 즉시 혜택을 받고, 이로 인해 약 €8.9 억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아동 수당을 인상하고 소득세 체계를 조정하여 실질 소득 증대
 - * 아동수당 월 지급 금액은 현재 €255에서 €259로 상향
 - *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기준을 1인가구는 €12,096에서 €12,348로, 부부합산소득은 €24,192 에서 €24,696로 상향

□ 통근자 공제액 인상, 외식업 부가가치세 인하 등의 세금 감면 시행

- 감면조치에 따른 비용은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수준 부담하게 되며, 향후 몇 년간 수십억 유로 규모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전망
- * 통근자 공제액은 2025년 1~20km 30센트, 21km 이후 38센트로 구분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첫 1km부터 km당 38센트로 통일
- * 외식업 음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현재 19%에서 7%로 영구적으로 인하

참고자료

- 2026 회계연도 독일연방 예산법 홈페이지
<https://www.gesetze-im-internet.de/index.html>
- 독일 연방 재무부 홈페이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Web/EN/Home/home.html>
- 국제금융센터, 독일재정정책 집행 현황 및 평가
https://www.kcif.or.kr/economy/economyView?rpt_no=36747&mn=003004
- 코트라 보도자료, 2026년 독일의 주요 제도 변화 한눈에 보기
<https://dream.kotra.or.kr/dream/kotra/actionKotraShortUrl/yc4IiIVllKn4.do>

FIS 해외재정동향 2026년 1-4월

발 행 연 월 2026년 5월
발 행 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Tel. 02-6908-8200)
인 쇄 처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스쿨프린팅그룹(주)
(Tel. 02-2258-3366) <http://schoolpt.co.kr>

FIS 한국재정정보원

